

# 새로운 학문 생산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 단체와 연구자 공동 심포지엄

일 시 : 2019년 8월 29일 (목)

장 소 : 성균관대학교 다산경제관 2층 32208

<참가 또는 연대하는 학회 및 단체> 구결학회, 구보학회,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국어학회,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근역한문학회, 대중서사학회,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정책연구소, 도시사학회, 독립연구자네트워크, 문학과영상학회, 민족문학사학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상허학회,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자의 집, 인문학협동조합,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공간과환경학회, 한국고소설학회, 한국고전문학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사고와표현학회,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한국서지학회, 한국시가학회, 한국시학회, 한국여성문학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한국한문학회

## < 심포지엄 순서 >

### ◆ 축하 · 인사말 (1:30~1:45)

박구용(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 본부장)

장봉규(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장)

구슬아(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위원장)

### 1부> 발표 1:45~3:05

사회: 박숙자(대중서사학회)

1. 한국 학계에서 지식커먼즈의 대안적 생산·공유의 과제  
박서현(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 연구센터)
1. 학술논문 DB 유통 문제와 신자유체제 하의 학문(장)의 변형  
류준경(한국고소설학회), 천정환(인문학협동조합)
1. 학문의 위기와 한국연구재단: 조직혁신 및 학술지원 정책 방안  
배성인(학술단체협의회)
1.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출판 전환 사례  
정경희(한국기록관리학회)

### 2부> 토론 3:30~5:30

사회:천정환(인문학협동조합)

1. 김소형(한국연구재단), 박상민(한국사고와표현학회), 박배균(연구자의 집), 이재윤(한국정보관리학회), 흥기빈(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1. 청중 자유토론

### 3부>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연구자 연대 선언

### ◆폐회

## <발표 논문 순서>

박서현(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 연구센터)	
한국 학계에서 지식커먼즈의 대안적 생산·공유의 과제 .....	1
류준경(한국고소설학회), 천정환(인문학협동조합)	
학술논문 DB 유통 문제와 신자유체제 하의 학문(장)의 변형 .....	15
배성인(학술단체협의회)	
학문의 위기와 한국연구재단: 조직혁신 및 학술지원 정책 방안.....	27
정경희(한국기록관리학회)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출판 전환 사례 .....	43
선언문	
새로운 학문생산체제와 지식공유를 위한 연구자 연대 선언 .....	45

## 한국 학계에서 지식커먼즈의 대안적 생산·공유의 과제

박서현(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논문과 같은 학적 지식은 사회적 협동의 결과인 이미 생산된 지식, 공통의 부에 영향을 받아서 생산되고 다시금 이 공통의 부의 성장에 기여하는 커먼즈(communs)이다. 그런데 한국 학계에서는 현재 지식커먼즈가 지식 생산자들 자신에 의해 자율적으로 생산되고 민주적으로 관리되며 평등하게 공유된다고 보기 힘들다. 먼저 학술논문 상용DB업체가 지식커먼즈의 자유로운 공유를 막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지 등재제도 등을 통해서 지식커먼즈의 생산·관리를 공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연구재단의 이러한 지배 하에서 나타나는 예컨대 업적을 부풀리기 위해 논문을 양산하는 경향 등은 지식커먼즈의 부패 혹은 부패한 지식커먼즈의 생산에 다름 아니다. 아울러 연구재단이 주도하는 지식커먼즈의 오픈액세스 정책은 학술지 평가항목에 오픈액세스를 포함시킴으로써 오픈액세스를 학회에 실질적으로는 ‘강제’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학술지 등재제도를 강화하고 이 제도 속에서 지식커먼즈가 생산되는 것을 ‘고착화’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픈액세스의 주체는 관이 아니라 비판적인 지식 생산자들과 진보적인 학술단체들의 연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미 생산된 지식에 대한 오픈액세스만이 아닌, 지식 생산자들의 사회적 협동을 심화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지식 공유의 플랫폼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플랫폼의 맹아적 형태로 ‘공개동료평가’(open peer review)나 ‘리빙리뷰’(living review)에 기반한 플랫폼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한국 학계에서 지식커먼즈가 생산·공유되는 방식이, 지식 생산자들 자신의 변화 없이, 일종의 혁신적 플랫폼을 갖추는 것만으로 변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지식커먼즈의 자율적이고 대안적인 생산·관리·공유를 위해서 비판적 지식 생산자들과 진보적 학술단체들로 이루어진 연합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 서론

2018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컨소시엄과 (학술논문 상용DB업체인) 누리미디어(주)·한국학술정보(주)의 공동구매 구독료 협상이 결렬되어 재협상에 어려움을 겪은 데 이어, 올해에도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와 누리미디어의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현재까지 전국 10개의 국공립대학에서 누리미디어가 제공하는 학술정보서비스 디비피아(DBpia)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와 상용DB업체와의 반복되는 구독료 협상 결렬이 작년 4월에 있었던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단체의 오픈액세스출판 선언”의 배경이 되었을 뿐 아니라 ‘지식 생산과 공유’의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오늘의 “새로운 학문 생산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 단체와 연구자 공동 심포지움”의 배경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한편에서 이 심포지움은 학술논문의 자유로운 공유를 막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상용DB업체의 문제를 지적하고 오픈액세스를 통한 학적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를 실

천·달성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 이 심포지움은 이미 생산된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학계에서 지식이 현재 ‘생산’되는 방식을 문제시하고 ‘새로운 학문 생산체제’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이미 생산된 지식을 어떻게 자유롭게 공유할 것인지를 탐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어떠한 지식을 왜 그리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 지식의 대안적 생산의 필요와 그 양식에 대한 성찰이다.

본고에서 수행할 이러한 탐구·성찰은 학술 논문과 같은 학적 지식을 ‘커먼즈’(commons)로 이해하는 데 기반해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학적 지식은 커먼즈인 것일까? 아울러 -앞으로 드러날 것이지만- “학적 지식은 커먼즈다”라는 규정이 역으로 한국 학계에서 지식커먼즈의 대안적 생산·공유의 양식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식커먼즈의 생산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 물음들을 검토하기로 하자.

## 커먼즈로서의 학적 지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학적 지식은 기존의 연구, 이미 생산된 지식의 영향 하에 생산된다.<sup>1)</sup> 학적 지식은 기존 지식에 기반하여 공동작업과 같은 사회적 협동을 통해 생산된다. 물론, 직접적인 공동작업은 사회적 협동의 한 양태일 뿐이다. 어떤 개인이 혼자 연구를 하더라도 그녀의 연구는 사회적 협동의 결과인 이미 생산된 지식이라는 공통의 부에 영향을 받아서 이 공통의 부의 성장에 기여하는 식으로 사회적 협동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사실, 동료평가의 본령 또한 지식 생산에 대한 학문 공동체의 기여라는 의미에서의 (지식의) 공동 생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적 지식이 커먼즈인 이유는 이와 같이 그것이 우선적으로 사회적 협동의 결과인 공통의 부라는 점 때문이다.<sup>2)</sup>

- 
- 1) 실은 이것은 학적 지식만이 아니라 다른 지식에도 해당되는, 지식 일반의 특성이다.
  - 2) 커먼즈를 지구와 그것의 생태계의 부이자 사회적 협동으로부터 귀결되는 사회적 부와 같은, 부의 형태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Michael Hardt·Antonio Negri, *Assembly*,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137, 166쪽 참조. 물론, 하트와 네그리는 커먼즈 대신에 ‘공통적인 것’(the comm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커먼즈와 공통적인 것은 추상의 정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본질은 같다. (커먼즈와 공통적인 것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남영·윤영광, 「커먼즈 운동이란 무엇인가?」, 『커먼즈, 가장 오래된 젊음의 씨앗』, 도서출판 제노, 2018, 1쪽과 윤영광, 「블록체인 P2P의 민주적 기술로서의 가능성」,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연구보고서』, 2018.5, 15쪽 참조. 다른 한편에서 학적 지식이 커먼즈인 이유를 학적 지식을 일종의 자원으로 보고서 이 자원의 성격에 근거하여 규정하는 논의도 있다. 공동자원(common pool-resources)에 대한 연구로 200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비배재성’과 ‘비경합성’이라는 (자원의) 성격을 가지는 지식을 커먼즈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지식 커먼즈에 대한 엘리너 오스트롬의 이해에 대해서는 샬럿 헤스·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자원으로서의 지식」, 『지식의 공유』, 김민주·송희령 옮김, 타임북스, 2010, 27, 35쪽 참조. 아울러 지식은 그것의 생산에 이미 생산된 지식이라는 ‘자원’, 학문의 공동체라는 의미의 ‘공동체’, 선행연구 검토·동료평가와 같은 ‘규칙’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원+공동체+일련의 사회적 규약’로 정의되는 커먼즈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식의 커먼즈에 대한 정의는 데이비드 볼리어(David Bollier),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배수현 옮김, 갈무리, 2015, 40쪽 참조. 이외에도 커먼즈는 ‘자원+커머닝(communing)+생산물’ 등으로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학적 지식이 우선적으로 사회적 협동의 결과인 공통의 부라는 점에서 커먼즈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커먼즈에 대한 다양한 규정과 커먼즈를 커먼즈에게 만드는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커머닝이 가지는 사회운동적 성격에 대해서는

학적 지식이 공통의 부라는 것은 그것이 개인이나 자본이 -실제로 혹은 사실상- 사적으로 소유하고 유통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사적인 것'(the private)이 되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국가나 한국연구재단과 같은 준정부기관 등이 관리·지배하는 '공적인 것'(the public)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금의 상용DB업체의 작태가 다름 아닌 자본에 의한 지식의 -사실상- 사적인 소유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의 부로서의 지식이 사적인 것으로 소유·매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자본에 의한 지식의 사적 소유의 폐해만큼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는 지식에 대한 소위 '공적' 관리와 지배이다. 연구재단이 시행하는 학술논문 오픈액세스 정책뿐 아니라 학술지 등재제도와 같은 학적 지식의 (공유·생산에 대한) 공적 관리·지배는 공통의 부로서의 학적 지식을 지식 생산자들이 자유롭게 생산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며 평등하게 공유하는 것, 달리 말해 지식 생산·관리·공유의 자율성을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지식 생산자들이 생산한 공통의 부인 '공통적인 것'을 부패시키며 나아가 지식 생산자들로 하여금 부패한 공통적인 것을 생산하도록 강제한다. 지식 생산자들이 생산한 공통의 부가 그저 개별 지식 생산자들의 임용, 승진, 연구비 수주·평가 등을 위한 양적 척도가 된다거나 혹은 그저 이 척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을 생산하는 것 등이 바로 공통적인 것의 부패와 부패한 공통적인 것의 생산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식을 커먼즈로서 이해하는 것은 공통의 부로서의 지식이 개인이나 자본이 사적으로 소유하는 사적인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국가나 준정부기관 등이 관리·지배하는 공적인 것이 되어서도 안 되며 지식 생산자들 자신이 사회적 협동 속에서 지식을 자유롭게 생산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며 평등하게 공유해야한다는, 지식의 자율적 생산·관리·공유의 과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학적 지식을 커먼즈로서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은 커먼즈다'라는 확인이 아니라 커먼즈로서 지식을 구성해야하는 과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 상용DB업체에 의한 지식커먼즈의 유통·매매의 문제

먼저 지식커먼즈의 공유라는 문제에서부터 위 과제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자. 1993년 웹브라우저가 사용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90년대 후반에 이미 국내 학술지 웹 데이터베이스가 상업화되었고 2000년대 중반에는 저작권신탁기관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누리미디어·한국학술정보 사이에서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 및 고소가 이루어진다. 저작권 분쟁을 겪으면서 누리미디어는 각 학회들이 출판하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개별저자들로부터 학회에 저작권을 이양할 것을 동의하는 문서('저작권이양동의서')를 받아줄 것을 권고했을 뿐 아니라 저작권이양동의서를 받기 이전의 논문에 대해서는 학회가 이미 관리한 논문들의 경우 저작권이 학회에 귀속된다는 식으로 규정을 보안할 것을 권고했다.<sup>3)</sup>

---

정영신, 「커먼즈론에 입각한 사회변동 연구를 위한 개념적 접근」, 『공동자원의 영역들』, 진인진, 2019 참조.

3) 누리미디어가 학회에 저작권이양동의서를 받아줄 것을 권고한 것과 저작권이양동의서를 받기 이전 논

저작권의 학회 이양에 대한 누리미디어의 권고는 -실은 학술논문이 지식커먼즈, 즉 사회적 협동의 산물인 공통의 부라는 말의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어떤 학술논문을 그 저자가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물음 제기에 앞서- 그 학회에서 활동하는 저자에게 자신의 논문이 학술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이 되도록 그녀의 동의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한다면 논문 저자조차 자신의 논문을 더 이상 또 다른 사회적 협동의, 또 다른 지식 생산의 원천이 되도록 자율적으로 공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017년에 이루어진 한 연구는 한국연구재단등재지의 경우 저작권이용동의서를 사용하는 등재지가 50%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저작권 분쟁이 진행되고 있던 2008년보다 25%가 증가한 비율이었다. 아울러 저작권이라는 표현 대신에 복제권·전송권 등 지적재산권의 지분권을 언급하는 등재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저자의 권리보다 출판하는 측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점, 아니 실은 학회의 권리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따른 것이었다기보다는 학술논문의 유통·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상용DB업체의 요청과 그에 대한 학회의 무비판적 수용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상용DB업체의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학술지를 출판하는 학회로부터 개별저자들의 권리양도·이용허락을 받아낼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필요가 저작권의 보다 더 명확한 관리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sup>4)</sup>

나아가 현재 디비피아에서 제공하는 '이 논문을 인용한 논문', '함께 이용한 논문', '추천 논문' 및 '이용수'와 '피인용수' 등의 서비스<sup>5)</sup>를 상용DB업체가 전자화된 논문의 유통을 넘어 이 유통을 통해 논문 이용·인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자체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지식 생산자들에게 또 다른 지식 생산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유 하에 실은- 추가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또 다른 지식 생산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디비피아라는 상업적 플랫폼에서 각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이 단순히 유통·매매되는 것을 넘어 논문들이 이용·인용된 정보를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논문을 실제로 생산하지 않은) 상용DB업체가 일종의 자신의 콘텐츠로 개발·소유함으로써 저 상업적 플랫폼에 대한 지식 생산자들의 의존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낳는 것이기 때문이다.

---

문들과 관련하여 저작권 규정을 보완한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홍재현,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을 위한 저작권 귀속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1), 2008, 439쪽 참조. 저작권 규정 보완에 대한 누리미디어의 권고 문구는 다음과 같다. “학회지 또는 논문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홍재현, 앞의 글, 439쪽.

4) 저작권이용동의서 사용에서의 변화와 같은 저작권 정책 변화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경희·김규환,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 변화 의미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4(2), 2017, 176쪽 참조.

5) (한국학술정보에서 제공하는) 학술정보서비스 KISS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이들 서비스는 2013년에 '이 논문과 함께 다운받은 논문' 서비스로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박대광, 「DBpia 7.0 & DBpia Insight 서비스 소개」, 『디지털도서관』, 83, 2016, 84쪽 참조.

## 지식커먼즈 생산에 대한 국가의 관리·지배: 학술지 등재제도를 중심으로

지식 생산자에게 기생하고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를 막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상용DB 업체의 기생성·약탈성이라는 문제와 함께 검토해야하는 것은 다름 아닌 커먼즈로서의 지식의 구성 혹은 지식커먼즈의 생산이라는 문제이다.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단체의 오픈액세스출판 선언”뿐 아니라 오늘 이 심포지엄의 발단은 어찌보면 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지식 공유’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국 학계에서 지식이 생산되는 양식이 바뀌지 않고서 -예컨대 학적 지식에 대한 연구재단 같은 관이 주도하는 오픈액세스에 성공한다고 하여- 지식 생산자 자신에 의한 지식의 자율적 생산, 민주적 관리가 성취될 수는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물론 상용DB업체와 같은 기생적·약탈적 자본에 반대하면서 지식의 ‘공공성’에 근거하여 오픈액세스를 추진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 지식을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데 기반해 있는 자본의 논리를 비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우며, 그것의 주체가 누구이냐라는 물음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말해 그 주체가 관이나 아니면 민 즉 지식 생산자들 자신이나는 물음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여하튼 오픈액세스는 실천해야한다는 논리를 정립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역으로 필요한 것은 학술논문 오픈액세스의 주체가 왜 지식 생산자들 자신이 되어야하는가, 나아가 지식의 공유·관리뿐 아니라 지식 생산의 자율성이 왜 요구되는가를 규명하는 일이다. 이는 한국 학계에서의 지식 생산에 대한 연구재단의 관리·지배라는 문제뿐 아니라 저 관리·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대학과 (교수를 위시한) 지식 생산자들의 연구재단에의 종속이라는 문제를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여러 측면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지식커먼즈의 대안적 생산·공유라는 과제와 관련하여 특히 연구재단의 학술지정책을 중심으로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실 연구재단의 학술지정책에 대한 비판은 이미 오래된 것이다. 연구재단의 전신인 학술진흥재단<sup>6)</sup>에서 1998년에 시작한 학술지 등재제도는 실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시장화’와 ‘경쟁력’이라는 구호 아래 이루어진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 정책의 일환이었다.<sup>7)</sup> 학술지 등재제도는 그것을 통해 “G20, OECD 회원국의 수준에 걸맞는 세계적인 학문수준으로 학술지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sup>8)</sup>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술진흥재단이 도입한 것,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세계적인 전문지식과 기술을 산출할 수 있도록 [...] 정부의 학술지 지원사업[이] [...] 추진되어, 국내학술단체 발행 학술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었다.<sup>9)</sup>

6) 연구재단은 한국과학재단·학술진흥재단·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통합되어 2009년에 출범한, 한국 학계에서 수행되는 연구를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이다.

7) 학술지 등재제도가 국가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배성인, 「대학의 시장화와 한국연구재단 학술 지원 사업: 비판과 과제」, 『지식의 공공성 딜레마』, 알렘, 40쪽 참조.

8)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인문과, 「학술지 지원 제도 개선방안: 현 학술지 평가 제도의 학계 자율평가체제로 전환 및 우수학술지 육성」, 2011.12, 1쪽.

9) 심광보 외,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 육성 지원 사업 추진 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용역,



학술진흥재단이 주도한 학술지 등재제도는 국가 경쟁력을 고취하기 위해 학술활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국제적 수준을 따르는 학술지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도모는 국내학술지가 소위 SCI학술지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sup>10)</sup> 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생산적 지식·기술의 생산”일 뿐 아니라 “최근에는 기초연구의 상업적 가치에 주목하여 연구 활동을 독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sup>11)</sup> 먼저 국내학술지의 수준을 향상시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로 만들면 그것에 게재되는 논문도 세계적인 전문지식일 것이고 이러한 전문지식의 생산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며 나아가 저 지식은 -바라건대- 그 자체가 상업적 가치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 하에 ‘목표지향적’으로 추진된 학술지 등재제도는 단기간에 국제적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 가시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편리한 방법인 ‘계량화’를 학술지 평가에 도입하게 된다.<sup>12)</sup> 물론 학술지 등재제도는 각 학회들로 하여금 저 제도가 요구하는 양적 기준에 맞춰서 학술지를 출판하는 것과 같이,<sup>13)</sup> 학

2010, 14-5쪽.

10) “지난 수년간 정부에서는 국내학술지의 내실화와 국제화를 통해 학문연구의 심화와 함께 국내학술지가 SCI학술지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학술단체에 학술지 발행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심광보 외, 앞의 글, 17-8쪽. 물론 (연구재단이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인) 이 보고서의 내용이 연구재단의 공식적 견해는 아니지만 2010년 이전의 학술지 등재제도의 취지·평가와 관련하여 연구재단과 이 보고서의 입장이 과연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이미 연구재단에서도 과거 학술지 등재제도의 문제를 인지하고 2014년에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이는 학술지 등재제도를 도입하게 된 그 취지를 과거의 제도로는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하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가 유보된 이후 2015년부터 시행된 우수학술지 등재제도는 등재학술지의 일부를 소위 SCI학술지로 등재될 수 있도록 이 학술지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학술지의 국제화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학술활동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고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실은 20여 년 전에 처음 시작한 학술지 등재제도의 논리가 연구재단에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준정부기관인 연구재단에서 학문·연구·공부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지 않은 채 -실은 제기할 수 없는 것일테지만- 그것의 의미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종속시키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니 저 재단에게는 학문의 국가 종속이 당위일 뿐 아니라 그것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과거 학술지 등재제도의 의미를 평가하고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하는 저 보고서의 입장을 -필자가 보기에는- 연구재단의 그것과 다르다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실제로 연구재단의 2013년 7월 19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학술지 지원 대상 중 역량이 뛰어난 학술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Web of Science(SCI(E), SSCI, A&HCI)나 Scopus 등재에 필요한 비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학술지 등재제도 유지·보완 추진: 국내학술지 지원 유지 및 신생·소외 학문분야 학술지 지원 강화 등 학술지 지원정책 개선 병행”, 2013년 7월 19일 보도자료.) 이는 등재학술지의 일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소위 SCI학술지로 등재시키는 것이 과거 학술지 등재제도의 폐해가 노정된 이후에도 연구재단의 변함없는 과제였으며, 그리고 아마도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을 과제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것은 아닐까? 물론,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제기되지 않았었던 혹은 제기되었어도 그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인 연구재단의 경우에는 국가 경쟁력의 강화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물음 그리고 한국 학계에서 지식커먼즈의 대안적 생산·공유의 과제를 검토하는 지금 여기에서 다시금 던져야하는 바로 그 물음은 다름 아닌 “학문·연구·공부의 의미란 진정 무엇이고 그것의 성장이란 진정 무엇이며 나아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그것의 기여는 진정 무엇인가”이다.

11) 심광보 외, 앞의 글, 17-8쪽.

12) 학술지 등재제도의 목표지향성과 계량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김창록, 「학술지와 학술진흥: 법학학술지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대학교 법학』, 50(2), 2009, 60쪽 참조.

13) 학술지 등재제도는 정시발행 여부, 연간 발간횟수, 게재율, 투고자의 국내외 분포도, 논문 1편당 심사위원수, 편집위원의 심사점유율, 편집위원의 전국성, 편집위원의 중복성과 같은 항목들을 계량화하

회들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다. 학술지 등재제도를 위해 도입된 계량화는 무엇보다도 대학뿐 아니라 교수와 강사, 연구원과 대학원생 등 한국 학계를 구성하는 지식 생산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적으로 대학은 학술지 등재제도를 교수 임용과 승진, 연구비 수주와 평가 등에 활용하는 식으로 교수 업적평가 기준으로 활용했다. 물론, 교육부 산하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학술진흥재단이 시행하는 사업, 즉 등재(후보)학술지를 선정할 뿐 아니라 선정된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의 수를 일괄적·계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교육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sup>14)</sup>

보다 더 큰 문제는 대학뿐 아니라 (학술지를 실제로 발행하던) 많은 학회들을 구성하고 있던, 교수들을 비롯한 지식 생산자들이 학술지 등재제도와 그것의 계량화된 평가방식을—물론 그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 흐름을 거슬러간 지식 생산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분명하지만— 집단적 비판·저항의 과정 없이 대체로 수용하면서 임용·승진·연구비 수주 등에서 소위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술진흥재단 선정 등재학술지에 논문을 투고·게재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아니 지식 생산자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일 뿐 아니라 가능한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점이다.

이미 오래된 일이 되었지만 논문을 ‘양산’하는 것, 등재학술지에 게재한 논문편수가 많은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자로—물론 소위 SCI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가 학술진흥재단 선정 등재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보다 더 우수한 연구자로— 간주되는 것, 등재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편수를 그저 늘리고자 실은 별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논문들이 대거 늘어났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지식 생산 양식이 상대적으로 젊은 지식 생산자들에게서도 쉽사리 발견된다는 것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고 어떤 점에서는 우수등재지·등재지·등재후보지라는 서열화를 통해 더 고착·강화되고 있는 학술지 등재제도에 대해서—물론 저와 같은 지식 생산 양식이 단순히 학술지 등재제도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대학의 구조조정 속에서 사회적 삶을 재생산하는 데 있어 위기에 봉착한 특히 젊은 지식 생산자들의 상황 등 현재 한국 학계가 직면한 다른 문제들과 분리불가능한 면이 있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5)</sup>

---

여 학술지를 평가한다.

14) 물론, 이 당연함이 올바름을 의미하는 것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대학은 그것의 자율성을 지키는 것의 의미를 고민해본 적도 고민할 필요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니 실은 그런 고민은 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교수는 겁박하여 쫓아내는 곳이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대다수의 대학은 그것의 자율성에 비춰 교육부 정책의 시비를 가리는 곳이 아니라 저 정책을 마땅히 따르는 곳이자 이제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어 그것을 부득불 따를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15) 이미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인문과에서 2011년에 발표한 「학술지 지원 제도 개선방안: 현 학술지 평가 제도의 학계 자율평가체제로 전환 및 우수학술지 육성」에서 학술지 등재제도가 등재(후보)지 게재 논문편수 중심의 교수업적평가 등으로 인한 논문 실적 부풀리기와 같은 연구자의 일탈행위 조장, 학술지 질의 하향평준화, (연구자가 학술지 평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되는 것과 같은) 학계의 자율적 평가 역량의 약화와 같은 폐해를 초래했다고 말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인문과, 앞의 글, 2011.12, 4-5쪽 참조.)

학술지 등재제도와 부패한 지식커먼즈의 생산: 국가-대학-지식 생산자들의 삼각관계  
 논문편수가 많은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자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업적을 부풀리기 위해 논문을 양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학적 지식이 사회적 협동에 의해서 생산된 공통의 부로서 커먼즈이기는 하되 한국 학계에서 그것이 부패한 공통적인 것, 부패한 커먼즈로서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지식커먼즈의 이러한 부패를 막는 것 혹은 지식 생산자들이 지식을 무엇보다도 ‘자율적으로’ 생산함으로써 그것을 진정 커먼즈로서, 부패하지 않은 커먼즈로서 구성해야하는 과제가 제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을 커먼즈로서 구성하는 과제는 지식이란 무엇이며 양적 척도에 따른 업적평가를 위해 그것을 양산하는 것과는 다른, 지식의 생산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할 것을 그리고 이러한 물음의 연장선에서 지식커먼즈를 실제로 생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커먼즈로서의 지식이 가지는 특징 중의 하나는 사회적 협동을 통해 생산된 지식이 공통의 부인 기존 지식의 성장에 기여하고 그리하여 새로운 공통의 부를 구성한다는 점에 있다. 그 자체 사회적 협동의 결과인 지식커먼즈가 새로운 공통의 부를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 기존 지식을 심화·변형·확대한다는 점, 이러한 심화·변형·확대는 예컨대 사회과학·인문학의 경우 현존하는 사회질서나 가치체계 혹은 근본개념을 다르게 이해하며 이러한 질서·체계·개념을 새로이 분석함으로써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었고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이게 해주는 것, 즉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식커먼즈의 또 다른 특징은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는 일종의 특이성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지식커먼즈의 특징 중 하나가 특이성이라는 점은 다시금 학술지 등재제도가 과연 저 특이한 지식커먼즈의 생산을 장려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끔 만든다. 물론 계량화를 그 원리로 하는 학술지 등재제도가 저와 같은 지식커먼즈의 생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산과는 무관하며 나아가 그것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컨대 이러한 지식커먼즈의 생산은 어찌보면 진정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일 수도 있으며 등재학술지에 적합한 논문의 형태로는 출판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그럼에도, 저 지식커먼즈는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 수십 편, 어쩌면 수백 편보다 사회적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단순히 국가 경쟁력 강화가 아닌 사회와 인간의 일종의 보다 더 건강한 변화, 달라짐에 초석을 놓는 것일 수도 있다. 애초에 지식이란 진정 무엇이며 (국가가 아닌) 인간·사회에 대한 지식의 기여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제기할 수도 없었고, 제기할 필요도 없었던 학술지 등재제도가 이러한 지식커먼즈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에도 학술지 등재제도의 폐지를 다시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술지 등재제도는 실은 이미 2014년에 폐지하기로 결정되었다가 폐지가 유

16) 실은 아마도 창조성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혁신성이라고 불리기도 했을 이 특이성이 지식 생산에 있어 전통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특이한 지식이 어떤 그저 참신한 지식과 같은 것일 수는 없다. 오히려 사회적 협동 속에서 기존의 지식을 심화·변형·확대하는 새로운 지식이 가지는, 공통의 부로서의 성격이, 즉 이 새로운 지식이 다시금 지식 생산자들이 협동적으로 생산한 공통의 부, 공통적인 것이라는 점이 지식의 특이성을 이해할 때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되었던 것이다. 폐지 유보의 핵심적 이유는 등재제도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현장’ 즉 대학과 전문가(?)의 의견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sup>17)</sup> 애초에 학술진흥재단이 시행하는 계량화된 평가방식을 교수 업적평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용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실은 저 업적평가 방식 자체를 교육부의 대학평가지표에 따라 수정하는,<sup>18)</sup> 교육부의 재정지원에 종속되어 있는 대학들이 학술지 등재제도의 폐해를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자율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가능하지도 않았고 아마도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등재제도 폐지가 분명 ‘여전히’ 시기상조일 것이다.

학술지 등재제도의 ‘외부’조차 생각할 수 없는 대학이 지식커먼즈의 자율적 생산을 위하여 현재 한국 학계에서 지식이 생산되는 양식을 개혁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 아울러 소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학술지 등재제도와 그것의 계량화된 평가방식을 수용하고 “각 학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를 등재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간행횟수를 늘이거나 회원확충을 위해 노력”<sup>19)</sup>하며 “학술지의 등재여부가 곧 학회의 권위와 명예를 판가름하는 ‘정부의 인증서’라는 인식이 팽배”<sup>20)</sup>한, 교수들을 비롯한 지식 생산자들이 이제는 저 제도의 폐해를 자각하고 한국 학계에서 지식이 생산되는 양식을 변혁하는 주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학술지 등재제도의 폐지가 유보된 이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등재제도의 문제가 지식커먼즈가 생산되는 방식에 대한 관의 실질적 지배·관리 뿐 아니라 등재제도의 원리가 되는 계량화된 평가방식에 대한 대학의 적극적 수용 그리고 - 거의 모든 ‘주류’학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논문을 많이 게재할 필요가 있던 교수들이 도처에서 등재학술지 출판을 위해 학회들을 만들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sup>21)</sup> - 교수들을 비롯한 지식 생산자들의 등재제도에의 자발적 종속이라는, 국가-대학-지식 생산자들 자신이 모두 얽혀있는 문제라는 것이다.<sup>22)</sup>

### 지식커먼즈의 대안적 생산·관리·공유의 주체: 비판적 지식 생산자들과 진보적 학술 단체들의 연합

이러한 진단은 지식커먼즈의 자율적·대안적 생산의 주체, 나아가 민주적 관리·평등한 공유를 실천하는 주체는 과연 누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게 만든다. 물론 그 주체

17)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계획 유보에 대해서는 “학술지 등재제도 유지한다...폐지계획 유보” 『아시아타임즈』, 2013.07.18. 참조.

18) 대학이 교수평가 방식을 교육부의 대학평가지표에 따라 바꾼다는 점에 대해서는 “단기 성과만 강요하는 연구풍토...학술정책, 독립·자율성 높여야” 『경향신문』, 2019.05.14. 참조.

19) 장덕현, 「학술지 평가정책에 관한 고찰: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1), 2004, 14쪽.

20) 장덕현, 앞의 글, 2004, 14쪽.

21) 학술지 등재제도의 도입 후 학회 수가 급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민주화 20년, 지식인의 죽음]III - (3)학술진흥재단과 학문의 창의성” 『경향신문』 2007.07.08.

22) 학술진흥재단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주류학회-학술진흥재단의 ‘삼각공모체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2003년 12월 12일자 『교수신문』에 재인용된 이병창 “학문적 권력을 해체하자” 참조. (“한 철학 교수의 논문중심 연구행위 비판” 『교수신문』 2003.12.12.)

가 지금까지 지식커먼즈의 생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오면서 그것을 부패시킨 국가일 수는 없고 국가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왔을 뿐 아니라 현재로서는 어떤 대안도 제시할 수 없는 대학일 수도 없다는 것. 그 주체는 응당 지식 생산자들 자신이어야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지식 생산자들 자신이 스스로를 저 제도에 자발적으로 종속 시켜온 면이 있다는 것은 이들이 과연 이제는 지식커먼즈를 자율적으로 생산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며 평등하게 공유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게끔 만드는 면이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픈액세스출판 선언을 통해서 지식의 평등한 공유를 실천해온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회들’ 뿐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학술지 등재제도를 포함한, 학술진흥재단·연구재단의 학술정책과 이 정책에 포섭된 대학의 문제를 비판하면서 대안을 모색해온 ‘민주평등 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자의 집’, ‘인문학협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의 ‘진보적’ 학술단체들이 결합되어 있는 바로 오늘의 이 심포지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오늘의 심포지엄을 통해서 한국 학계에서 지식커먼즈가 생산·관리·공유되는 양식이 전변할 수 있다거나 등재제도 폐지를 포함한 연구재단 학술정책의 변화가 바로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상용DB업체의 플랫폼이나 연구재단의 기초학문자료센터 등의 플랫폼이 아닌 새로운 지식 공유의 플랫폼의 필요를 -그리고 이 플랫폼의 구체적 형태를- 포함한) 현재 지식커먼즈가 생산·관리·공유되는 양식의 발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금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재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 발본적 변화를 위해서 진보적 학술단체들의 연합이 필요하며 나아가 이 연합이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혹은 그 이상의) 비판적 지식 생산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확장성을 가져야한다는 것과 함께 다시금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특히 지식 공유의 문제에서 점화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변화가 지식 공유·관리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생산되는 양식의 변화에까지 이르러야한다는 것. 지금 한국 학계가 봉착한 문제가 누리미디어와 같은 상용DB업체에 의한 이미 생산된 지식의 수탈이라는 문제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지식 생산자들이 어떤 지식을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라는, 지식 생산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문제를 연구재단 주도의 오픈액세스 정책을 통해서 다시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재단에서는 2000년대 후반에 공공기금을 지원받는 논문을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기초학문자료센터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논문을 포함한 연구 성과물을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오픈액세스 사업을 시작했다. 유의할 것은 연구재단의 오픈액세스 사업은 지식 생산자들 자신에 의한 자율적 오픈액세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이 사업은 학술지 등재제도의 평가항목에 오픈액세스를 포함시킴으로써 지식커먼즈의 오픈액세스를 실질적으로는 ‘강제’하는 수단. 결국 평가에 기초한 재정지원을 무기로 등재제도를 강화할 뿐 아니라 이 제도 속에서 지식커먼즈가 생산되는 것을 ‘고착화’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저 사업은 지식커먼즈를 평등하게 공유한다는 취지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일정정도 긍정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픈엑세스의 주체는 연구재단과 같은 관·국가가 아닌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지식 생산자들·학술단체들의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이 주체가 되는 지식커먼즈의 오픈엑세스는 - 연구재단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지식 생산자들 자신에 의한 지식커먼즈의 민주적 관리 및 지식커먼즈의 자율적 생산을 보다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달리 말해 부패하지 않은 지식커먼즈의 생산을 심화할 수 있는 공유의 방식, 이와 같은 식으로 지식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식 공유의 플랫폼이 무엇인지를 저 지식 생산자들·학술단체들이 집단적으로 고민하고 이러한 플랫폼을 실제로 구성하여 지식 커먼즈의 대안적 생산·공유를 실천해야 될 필요가 있다.

### 지식커먼즈의 대안적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비판적·진보적 지식 생산자들과 학술단체 연합이 주도하는 지식 공유 플랫폼의 필요성

지식커먼즈의 이와 같은 대안적 생산·공유는 실은 한국 학계의 일종의 문화가 바뀔 때 가능한 것이지 단순히 어떤 혁신적 플랫폼을 갖춘다고 하여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 플랫폼은 그저 지식 생산자들 자신에 의한 지식커먼즈의 대안적 생산·공유를 보조하는 수단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지식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안적인 지식 공유의 플랫폼, 지식 생산자들 자신의 사회적 협동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지식 공유의 플랫폼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의 이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지식 생산을 위한, 아니 단순히 추가적 지식이 아닌 '특이한' 지식 생산을 위한 지식 생산자들의 협동을 심화할 수 있는 지식 공유의 플랫폼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지식과 관심을 공유하는 지식 생산자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러한 집단적 소통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사회질서나 가치체계, 근본개념 등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논의들을 협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지식 공유의 플랫폼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달리 말해, 이미 생산된 지식의 오픈엑세스에 초점을 둔 지식 공유의 플랫폼이 아니라 비판적인 지식 생산자들의 다중지성에 초점을 둔 지식 공유의 플랫폼, 이 다중지성의 네트워킹에 초점을 둔 지식 공유의 플랫폼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sup>23)</sup>

23) 그것의 구체적 형태는 지식커먼즈의 오픈엑세스를 기본으로 하여 저 이념을 구현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플랫폼에 대한 구상과 실험,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생산된 지식의 단순한 오픈엑세스를 넘어서 또 다른 특이한 지식 생산을 위한 지식 생산자들의 사회적 협동을 심화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학적 지식의 오픈엑세스의 미래에서 중요한 요소가 지식 생산자들의 협동일 것이라는 언급은 Jean-Claude Guédon et al., *Future of Scholarly Publishing and Scholarly Communication: Report of the Expert Group to the European Commission*, 2019, 23쪽과 Michael Satlow, "Academic Publishing: Toward a New Model",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문은 각각 [https://www.eosc-portal.eu/sites/default/files/KI0518070ENN.en\\_.pdf](https://www.eosc-portal.eu/sites/default/files/KI0518070ENN.en_.pdf), <https://www.chronicle.com/article/Academic-Publishing-Toward-a/236526> (검색일: 2019.08.24.) 두 글에서 지식 생산자들의 네트워킹을 심화하는 오픈엑세스의 특정 모델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하에서 간단히 살펴볼 것이지만- 오픈엑세스 학술출판이 위와 같은 식으로 변화하

이러한 플랫폼의 맹아적 형태로 예컨대 논문을 온라인상에 업로드하여 해당 논문에 관심을 가지는 불특정 독자들, 연구자들 때로는 편집진이 선별한 심사자들로부터 논평을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누구나 달 수 있는 논평들을 논문 저자를 포함하여 다시금 누구나 읽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공개토론이 진행될 수도 있는, 나아가 기존 동료평가와의 연계도 가능한 ‘공개동료평가’(open peer review) 방식의 오픈액세스 플랫폼을 생각해볼 수 있다.<sup>24)</sup> 아울러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개발한 새로운 학술출판 모델로서 동료평가를 거치는 동시에 저자가 원하는 경우 자신이 쓴 논문을 계속해서 수정할 수 있는 ‘리빙리뷰’(living review)<sup>25)</sup>에 기반한 오픈액세스 플랫폼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sup>26)</sup>

만약 이러한 플랫폼들이 실제로 한국 학계에 도입된다면 뒤따르게 될 문제들이 무엇일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의 개선·보완은 어떻게 가능할지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실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플랫폼들이 설령 한국 학계에서 지식커먼즈가 생산·공유되는 양식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언정 어떠한 플랫폼을 갖추느냐가 지식 생산·공유의 양식을 결정하는 핵심적 원리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어떠한 플랫폼을 갖추느냐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지만, 지식 생산자들 자신의 변화 없이, 지식이란 무엇이고 지식의 성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지식의 (국가가 아닌)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여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어떠한 지식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집단적·비판적 성찰과 이러한 성찰에 근거한 지식 생산의 구체적 실천 없이 단순히 혁신적 플랫폼을 통해서 현재 한국 학계가 직면한 지식커먼즈 생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비판적인 지식 생산자들과 진보적인 학술단체들로 이루어진 연합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어찌보면 혁신적인 오픈액세스 플랫폼보다 이 연합이 더 중요하며 나아가 이 연합이 저 플랫폼을 주체적으로 구성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이 플랫폼이 지식 생산자들의 사회적 협동을 어떻게 심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 플랫폼에 개별적인 지식 생산자들이 그들의 생산물들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고 그들의 지식 생산을 심화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sup>27)</sup> 물론 이 플랫폼이 등재학술지용 논문 작성을 강제하는 것과 같은, 특정 양식의 지식 생산을 강제하며 그리하여 지식 생산

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4) 공개동료평가의 취지·의의에 대해서는 김하나·이지현, 「새로운 피어리뷰로서의 오픈피어리뷰에 대한 고찰」,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4.8. 76쪽 참조. 김하나·이지현은 특히 기존의 동료평가와 공개동료평가를 결합한 ‘두 단계 공개동료평가 학술지’(open two-stage peer-reviewed journals)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 구체적 사례로서 유럽지구과학협회에서 2001년에 창간한 「대기화학과 물리」지를 제시하고 있다. 김하나·이지현, 앞의 글, 76쪽 참조.

25) 리빙리뷰에 대해서는 웬디 프라트 루지, 「학술논문 세계와 도서관의 경계 완화: 공유자원 창조의 기회」, 『지식의 공유』, 김민주·송희령 옮김, 타임북스, 2010, 527쪽 참조.

26) 공개동료평가나 리빙리뷰에 기초한 오픈액세스 전자출판이, 아마도 지식 생산물의 수정·보완을 가능하게 하는 논평들을 학적 기여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변화를 일으킨 원인인 듯하다. 논평들이 학적 기여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Jean-Claude Guédon et al., op. cit., 23쪽 참조.

27) 이에 대한 구체적 고민·제안은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출판 전환을 위한 로드맵(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플랫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일 것이다.

대안적인 오픈액세스 플랫폼에 대한 논의와 함께 연구재단이 실은 ‘강제’하고 있는 오픈 액세스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개선하는 것은 지식 생산에 대한 국가 통제를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학술지 등재제도 평가항목 중 하나인 학술논문의 오픈액세스 항목에 학술지 및 수록 논문의 (논문 원문·저자정보·인용정보·통계정보 제공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등록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KCI는 ‘국가연구개발 표준성과지표’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sup>28)</sup>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연구재단이 주도하는 오픈액세스 정책이 과연 학적 지식의 자유로운 생산과 민주적 관리, 평등한 공유를 위해 시행된 것이었을까? 오히려 그 정책은 준정부기관인 연구재단에 축적된 논문들을 자원으로 삼아서 재단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리하여 그것의 존재이유 중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 시행된 사업은 아니었을까?<sup>29)</sup>

물론 이것이 연구재단의 오픈액세스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연구재단과 같은 준정부기관, 국가와 관계를 단순히 끊는 것과 같은 순수성의 추구가 아니라 필요할 경우 그것과 관계하며 그것에 축적된 예컨대 기금·자원·정보 등을 재전유하는 실천이다. 이러한 실천이 필요한 이유는 예컨대 연구재단과 같은 곳에 축적된 논문 데이터베이스가 우리의 과거 노동이 축적된 것으로서 우선적으로는 사인이나 자본이 수탈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30)</sup> 이것이 연구재단과 관계를 무조건 끊고서 비판적 지식 생산자들·진보적 학술단체들만을 중심으로 지식커먼즈의 오픈액세스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 오픈액세스를 단순히 연구재단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달성하는 것도 아닌, 연구재단에 이미 축적되어 있는 지식커먼즈들을 (그것을 실제로 생산한) 지식 생산자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이 구성할 오픈액세스 플랫폼으로 재전유하여 (관이

28) KCI가 국내연구개발 표준성과지표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현철, 「국내 학술지 등재제도 및 KCI 현황 소개」, 2014.12.05. 참조.

29) 2015년 3월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술지 논문 무상 공개 토론회’에서 연구재단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업체와 연계해 KCI 인용정보와 원문공개자료로 고부가가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학술논문도 이제 ‘공짜’? ‘오픈액세스의 딜레마’ 『오마이뉴스』 2015.03.05.) 이러한 언급은 연구재단이 주도하는 오픈액세스 정책이 실제로는 지식커먼즈의 민주적 관리와 평등한 공유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이 아니라 학술논문을 통한 자본 증식과 (이러한 증식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 나아가 커먼즈에 대한 관리·유통의 주체가 관이 되었을 때 관이 다시금 수익 사업의 주체가 되는 사례를 흔히 접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로서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지하수를 보전하는 것이 아닌 개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제주도정을 들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선필, 「공수에서 공동자원으로: 제주 지하수의 먹는 샘물용 증산 논란을 중심으로」, 『공동자원의 섬 제주1: 땅, 물, 바람』, 진인진, 2016 참조.

30) 국가 -그리고 자본- 와 관계를 단순히 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그것과 관계면서 그것의 원래 기획과는 ‘다른’ 기획을 양성·실천하는 ‘창조적 이중성’의 태도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창조적 이중성’에 대해서는 브라이언 마수미의 『가치의 재가치화에 대한 99개의 테제: 탈자본주의 선언』의 특히 94번 테제 참조. Brian Massumi, *99 Theses on the Revaluation of Value: A Postcapitalist Manifesto*, 2018 참조. <https://manifold.umn.edu/read/99-theses-on-the-revaluation-of-value/section/7a105a04-8cb5-4b6f-8818-2ca4cd070862> (검색일: 2019.08.24.) ‘창조적 이중성’에 대한 짧은 소개로는, 정남영·윤영광, 「디지털 커먼즈와 청년」, 『커먼즈, 가장 오래된 젊음의 씨앗』, 도서출판 제노, 2018, 14쪽 참조. 마수미의 분석은 원래 (국가가 아닌) 자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본고에서는 ‘창조적 이중성’의 태도가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닌) 지식 생산자들 자신이 민주적·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색·실천이 필요한 이유이다.<sup>31)</sup>

## 결론

이미 연구자의 집·학술단체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새로운 대안적 오픈액세스 플랫폼을 구성하는 움직임이 존재할 뿐 아니라 향후 이 플랫폼의 구체적 형태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이 플랫폼과, 한국에서 지식커먼즈 운동을 실천하는 단체 중 하나인 한국위키미디어협회의 위키미디어커먼즈(Wikimedia Commons)의 연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대안적인 지식 공유·생산의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러한 논의가 새로운 플랫폼의 구성에 그치지 않고 한국 학계에서 지식커먼즈가 생산·관리·공유되는 양식을 실제로 바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

분명한 것은 인문학의 위기, 대학의 위기 등 한국 학계의 소위 ‘위기’가 말해진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시기가, 위기라고 한다면 위기라고 할 수 있을 지금 이 시기가, 한국 학계에서의 새로운 학문 생산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한국 학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나를 진단하고 이 문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나아가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때 비로소 적실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 학계의 문제가 학술진흥재단과 연구재단과 같은 국가의 학술정책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식 생산자들 자신과 이들 다수가 몸담고 있는 대학·학회의 문제를 우회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한국 학계에서 지식커먼즈의 대안적 생산·공유는 단순히 혁신적인 오픈액세스 플랫폼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지식 생산자·학회·대학·연구재단 등으로 이루어진 학술 생태계 전체의 변화를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오늘의 이 심포지엄이 그리고 심포지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시작할 논의들이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서사’를 제공하고 이로부터 구체적 ‘실천’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저 변화는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

31) 지식 생산자들 자신이 지식커먼즈를 민주적·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오픈액세스 플랫폼에도 운영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분명한 것은 예컨대 국가가 정한 규칙을 잘 준수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지식커먼즈가 인간과 사회에 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점 때문에 일정정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지원이 국가에 대한 항시적 의존으로 귀결되어서는 결코 안 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이란 무엇이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지식의 기여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지식 생산자들 자신의 고민이 선행해야 하고 이러한 고민이 —만약 지원을 받는다면— 국가의 변덕스런 학술정책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지원의 논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는 점이다.

# 학술논문 DB 유통 문제와 신자유체제 하의 학문(장)의 변형

류준경(한국고소설학회)/ 천정환(민교협 학술위원회·인문학협동조합)

## I. 학술논문 DB 유통의 몇 가지 문제

### 1. 학술논문 DB 유통 구조와 민간 및 공공 학술논문 DB 구축 과정

학회 : 학술 지식생산의 주체이자 場(플랫폼). 회원의 학술 활동과 심사제도를 통해 학술 지식(논문)을 생산하며, 동시에 학술지식 생산의 플랫폼 역할을 함.

민간DB 업체 : 생산된 학술지식(논문)의 유통의 역할을 함. (1990년대 이전 학술논문의 DB화 및 집적 / 2000년대 이후 학회에서 생산된 자료의 집적 및 서비스(유료) 담당)

KCI / 한국학술정보원 : 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제도를 통하여 학술지식(논문) 집적.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 공공에게 학술지식의 무상제공 정책(Open Access)을 주요 과제로 시행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 중.

학술지식의 유통에서 민간 DB의 위상 : 기존 학술지(학술지평가 이전의 논문)까지 DB화 하여 서비스 제공. 2000대 이후 자료의 경우, 각 업체가 KCI보다 자료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학술DB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음.

학회와 민간 DB 업체의 최초 계약과정 상의 특징 : 1990년대 후반 kiss(한국학술정보), 2000년대 초반 DBpia(동방미디어) 등이 주도. 당시 학회에서는 디지털화를 통하여 첫째,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논문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논문의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점(지식의 공공성 강화), 둘째, 크지는 않지만 부수적으로 열악한 학회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당시에는 학회나 학계에 저작권/이용권 개념도, 학술논문의 공공성 개념도 희박하였음.

### 2. 학술지식(전자저널) 유통의 특징 -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비를 중심으로

○ 생산자(학회) - 유통자(민간DB업체) - 소비자(대학도서관의 이용료)

민간DB 업체에게 학술논문 서비스 이용료는 주로 (대학)도서관이 지불함. 학회(생산자)는 민간업체로부터 저작권료 혹은 콘텐츠 이용료로 전체 이용료의 약 20~25% 정도를 수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 저널의 출판(전자문서)도 학회가 담당하고 있기에, 민간DB업체는 지식의 생산이나 출판에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수익의 대부분을 갖는 구조임.

○ 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지속적 감소 추세이나 전자저널 구독비는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 - 최근 10년간 대학의 전자저널 구입비 약 2배 증가. (4년제 대학의 전자자료 구입비:

2009년 827억, 2018년 : 1,536억)

- 2008년 이후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비 지속적 감소 추세. (4년제 대학도서관 자료구입비 : 2012년 2,347억, 2018년 2,266억)

=> 도서관의 자료구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전자자료 구입비는 크게 증가하였음

○ 도서관 전자저널 구독비의 90% 이상은 해외 전자저널 구독료

- 해외저널의 경우, 주요 해외 출판사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급격한 가격 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현재 한국 대학도서관 전자저널 구독비의 90% 이상이 해외저널 구독비임

- 해외저널 구독비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원인은 해외 출판사의 독점적 지위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학술 제도의 성격 때문이기도. 연구업적 평가제도에서 이른바 SCI, SSCI, A&HCI 및 SCOPUS 급 학술지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에 이에 대한 한국 학술계의 종속성이 높은 구조임. 특히 인문사회 학술논문조차 SSCI, A&HCI 등 영어권 학술지를 높게 대우하기에 해외 출판사의 저널, 특히 영어권 전자저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된 것.

○ 국내 전자저널 구독료도 급격한 인상 추세

- 국내저널의 경우도 급격한 가격 인상 진행 중.

-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해외와 달리, 협상 파트너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도서관 컨소시엄 등에서 협상을 종료하고 서비스를 해지하기도 함.

- 국내의 경우, 2000년대 후반부터 연구재단이 오픈액세스 정책을 시행하여, 등재학술지 평가제도에 활용함으로써 상당한 양의 국내 학술논문이 KCI에 등록되어 있기에 해외저널의 경우와 다르게 전면적인 계약 파기, 보이콧 등을 실행할 수 있었음.

- 등재학술지 평가제도에 OA 정책을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① 연구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미비와 ② 전문출판사의 부재 (민간 DB업체가 아니라 학회가 출판 담당)와 같은 우리나라의 특이한 상황이 존재함. 이에 따라 저작권자인 연구자와 ‘출판권자’인 학회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구재단이 일방적으로 OA 정책을 시도할 수 있었음. 한편으로 연구자와 학회는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평가와 지원을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연구재단의 정책이었기에 권리 행사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어려웠음(임상혁, 학술 논문의 오픈액세스와 저작권 양도, 법과사회 55호, 2017)

### 3. 전자저널 구독료 지원에 대한 논의 - 국가라이선스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해외 핵심저널에 대한 국가라이선스 정책

- 국가라이선스 사업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1997년 시작되었으나, 2016년 기획재정부의 ‘연구정보 일원화 지침’에 따라 중단되고, 현재는 ‘대학라이선스’ 사업으로 진행 중 (28종 품목에 대해 연구재단이 비용의 30%를 지원하는 방식)

- 해외의 경우, 핵심 전자저널 구독료 부분에 상당한 국가지원. 영국, 프랑스 등에서 전자자료 공공구매 컨소시엄을 운영하거나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공공기관에 무료로 제공함.

- 대학의 자료구입비는 감소하지만 전자자료 구입비는 크게 증가하는 현실의 사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라이선스 정책이 논의되고 있음(송선영, 「전자저널 국가라이선스 사업의 필요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9)

- 국가라이선스 사업을 통해 해외의 핵심 전자저널을 구독기관만이 아니라 비구독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저널 활용도 증가와 학술지식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확대할 수 있음

- 동시에 근본적으로 오픈엑서스를 지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함. 각종 연구성과물의 온라인 무료 공개의 법제화, 정부지원 연구성과물의 공개 법제화, 셀프아카이빙 정책 및 학술논문 평가방향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해외 출판사의 학술지식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학술지식의 공공성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함

#### ○ 국내 전자저널에 대한 ‘국가라이선스’ 정책의 위험성

해외 핵심저널에 대한 국가라이선스 정책 논의 과정에서 국내 전자저널의 라이선스화도 함께 논의될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함.

대학도서관의 급격한 국내 전자저널 이용료 증가에 대한 공공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라이선스’가 도입될 경우, 그간 추구되었던 학술지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무력화될 수 있음. 학술지식의 유통과정에서 민간업체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그에 따라 학술지식의 상업적 성격이 더욱 강화될 것임. (민간DB 업체에 대한 종속성 강화)

### 4. 학술 지식의 공공성에 대한 성찰과 학술 DB 유통의 과제

#### ① 학술 지식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걸음 : 민간 DB 업체와의 계약 변경과 OA 추진

- 민간 DB 업체와의 계약 변경에서부터 출발(문헌정보학 관련 학회 사례 참조)

KCI와 민간 DB 업체를 통해 학술지식(논문) 무상 제공(OA). (단, 장기적으로는 학회 운영진이 위원회로 참여하는 공공기반 학회 자료 집적 기관 (OA 기반) 구축 검토 필요.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학술 집단이 자료의 집적과 유통 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② 대학도서관 등의 학술 DB 이용료를 학회의 학술 지식생산 비용으로 지원

학회 학술지의 오픈엑서스 추진을 위해 학회는 학술 DB 이용료 수입을 포기해야 하고, 나아가 오픈엑서스 추진을 위한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함.

오픈엑서스 기반 구축을 위한 비용을 대학도서관이 학술 DB 이용료로 지급하던 것을 기금화하여 학회 지원에 활용하는 방식이 가능함. 동시에 민간 DB 업체가 수행하던 유통과

정의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현재 KCI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의 강화 등)

### ③ “학회 지원금”의 성격 문제

- 도서관의 학술DB 사용료(저작권 사용료)를 기금화하여 학회를 지원할 경우, 학회별 지원수준의 차이는? 논문 발행의 제비용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술지 이용 실적에 따라 기금이 배분되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학회가 OA를 선언하였다면, 학술지식 자체가 공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혹은 학술지식은 사적인 것이지만 그 권리를 제공/포기하여) 공공에 개방하는 것임. 이러한 공공개방의 정신에 입각한다면, 학회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OA 제도 구축을 위한 비용 이상이기 어려움. 학회별 지원 차이를 저작권 이용료의 차이로 이해할 경우, OA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일 수 있음. 이 지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음.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는 대학도서관 등은 민간 DB 업체의 서비스 이용료 상승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학술지식 생산자(학회)의 경우 학술지식 활용의 대가를 보다 높게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학술지식을 활용할 수 있기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의 혁신으로 이해될 수도 있음

하지만 대학도서관의 DB 이용료를 학회에 지원할 경우, 학회별 지원금 규모의 판정 근거가 문제시될 수 있으며, 동시에 학회 지원금이 커질 경우, 학술논문 이용실적에 따른 학회원(저작권자)의 차등 요구가 제기될 수 있음. 이 경우, 학술지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OA의 정신과 배치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학술지식 공공개방 제도(OA 제도) 구축이 논의되는 현시점에서 학술 지식의 공공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 필요함

### ④ 학술 지식의 공공성과 학술 지식 생산의 기반 조성

㉔ 학술지식 생산 지원 : 현재 학술지식 생산 지원은 R&D 성 지원이 대부분. 곧 국가 산업경쟁력을 위한 연구·개발의 맥락에서 학술 지식 생산을 지원함. 이때 학술 지식의 공공성은 ‘국가 산업경쟁력’이라는 공적 가치. 하지만 학술 지식의 공공성은 ‘국가 산업경쟁력’ 수준으로 환원할 수 없음.

#### ㉕ 학문의 자유와 학술 지식 생산

- 학문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된 기본권. 학문의 자유는 진리 탐구의 자유를 의미하여, 진리 탐구 과정은 학술지식의 갱신 과정이기도 함. 기본권으로서 학문의 자유(진리 탐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술지식을 갱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함. 곧 지금까지의 학술지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그 갱신(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해야 하는 것. (헌법 가치의 보장)

- “학회 지원금”이 단순히 OA 제도 구축 비용일 수 없는 근거가 여기에 있음. 국민으로서 누구나 자유로운 진리 탐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술지식 생산을 위한 비용을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기본권을 위해 사회적 기반을 갖춘다는 의미인 것. 따라서 “학회 지원금”은 저작 수익금 배분의 차원이 아니라 학술생산이 가능하도록 학술계를 활

성화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것.

- 다만, 사회적 비용의 크기와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함. 전임인 연구자(대학교수 등)의 경우, 학술 지식 생산비용이 그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나<sup>32)</sup> 비전임인 연구자의 경우, 학술지식 생산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하지만 학술지식 생산을 위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sup>33)</sup>

#### ⑤ OA 기반 구축과 연구재단의 문제

현재 학술지 OA 정책이나 운동은 학술지식의 공공개방의 맥락에서만 논의되고 있음. 특히 학술지식의 비고갈성, 무한 확장성 등에 주목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연구재단의 주요한 정책으로 모색되고 있음. (연구재단 NRF 2030 비전 5대 전략목표 “지식 창출의 플랫폼 역할 강화”)

학술지식이 집적되고 개방되는 학술플랫폼의 구축의 필요성은 크게 공감하지만, 그 자료의 집적과 관리가 연구재단 주도로 진행될 경우, 과거 학술지평가제도의 사례에서 확인되듯 학술이 학적 성취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양적 기준에서 평가되고, 그 결과 학술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큼.

실제로 연구재단은 양적 평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SCI, SSCI, A&HCI 등을 참고하여 한국형 평가제도를 새롭게 시행 운영 중. 기본적으로 SCI, SSCI 등은 정확한 학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학술논문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피인용지수(impact factor)는 해당 논문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고려사항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 척도가 될 수 없음. 특히 인문학의 경우 피인용지수가 큰 의미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A&HCI에서는 피인용지수를 아예 제공하지도 않고 있음. 그러나 연구재단은 KCI-IF라는 인용지수를 개발하여 인문학 분야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여 학술논문의 질적 평가 자료로 활용하게 함. 향후 이러한 연구재단의 평가방법으로 인해, 학적 성과가 학술계 내부의 동료들에 의해 인정되기보다는 KCI에서 학술을 평가하는 계량화된 방식에 의해 결정되고, 인문사회 학계에서조차 피인용지수(kci-if)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큼. 이는 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논문수가 한국 연구자의 학적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

따라서 학술플랫폼의 운영과 관리는 반드시 학술지식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연구자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함. 학술지식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면서 동시에 학술연구자의 자율과 책임 아래 학술지식이 운영, 관리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함.

이와 함께, 건강한 학계를 구축하기 위한 학계의 노력도 동반해야.

32) 국립대 교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립대 교원의 경우에도 국가장학금 제도 시행에 따라 급여에서 공공자금의 비율이 매우 높음.

33) 연구재단의 학술연구지원사업이 있으나 이는 특정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실제 학술지식은 비록 개인의 학술활동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학술공동체가 함께 구축한 공통기반 위에 존재하는 협동의 산물임. 따라서 학술계의 일원이라면 학술활동 영위를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연구자 기본소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박서현, 한국 학계에서 지식커먼즈의 생산과 공유에 대하여, 참조)

## II. 학회 : 신자유주의대학체제 하의 학문(장)의 변형

### 1. 경쟁적 논문 양산 체제의 구조

대학과 교육부(한국연구재단)는 논문 양산 체제라는 ‘구조’의 생산자. 학회는 그 하위 파트너 또는 하위 구조를 구성. 연구자들은 ‘체제’에 스스로 (과잉)적응하여 스스로 만든 매트릭스 속에 갇혀 있음.

#### (1) ‘조국 사태’에서의 논문과 학술

- ‘제1저자’ : ‘제1저자’를 지정하는 문화와 그 위상은 학문 분야마다 차이가 있는 듯. 모든 학문 분야의 관례와 문화를 일반화하기는 불가능함에도 고교생 인턴의 제1저자 지정은 연구 윤리 위반 또는 모랄헤저드라 봐야 한다는 게 중론.<sup>34)</sup> 의대 교수인 교신저자의 비학문적이며 비윤리적인 태도.<sup>35)</sup>

- 허술한 학문제도의 운용(2009년 당시의 관례?). 어떻게 해당 논문은 심사를 통과하고, 이후 SCOPUS에 등재될 수 있었나?

- 기타 : 정규직 교수 카르텔. 교수라는 계급재생산의 상층 행위자 집단

: 대학의 정규직 교수 집단이 각종 연구윤리 위반과 학술 부정행위의 주체. 특권층·전문직 등 상위 계급 네트워크의 주체.

#### (2) 구조 1 : 대학과 평가제도

- 8개 ‘클래스’ 또는 범주의 대학이 서로 다른 현실을 살아감.

(: 스카이(카포)-수도권 대형 사립대-지방 국립대-수도권 중소규모 사립대-지방 대형 사립대-수도권 전문대-지방 중소사립대-지방 전문대-기타<sup>36)</sup>)

- 그러나 교육 정책은 이런 현실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

: 상위 대학은 여전히 학벌 및 학력 판매처로서의 기능을 무리 없이 수행 중이나 중하위 대학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

- 신자유주의대학체제의 주된 내용은 대학들 간의 (글로벌 서열) 경쟁+생존경쟁을 주요 내용으로 함. 기업사회에 종속된 대학의 취업준비 기관화 및 ‘산학협력체의 하위 파트너화’는 신자유주의 대학체제의 외연.

- 오늘날 대학은 상업적 ‘대학평가’에 의해 주어지는 대학서열이나 취업율 등 외에 다른

34) ‘연구 윤리’의 한계와 주체의 개입

35) 「단국대 장영표 교수 “어떤 처벌도 받겠다…제1저자 지나쳤다”」 『채널A뉴스』 2019.08.22.

““애가 외국 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도와줘야 되고 고민고민하다가 에이.. 그렇다면 1저자로 놓자고 결정을 했어요. 지금 와서는 지나친 그런 게 돼 버렸죠.” “그 쪽에서 보호자들이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하게 된 거예요.”

36) 노중기, 「합법화 시기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민교협, 약간의 전망과 제안」 등 참조

객관화된 상징자본이나 '혁신'을 위한 자기 동력을 가지지 못함.

: 대학으로서의 존엄이나 정체성과 수익성을 동시 상실하고 착취와 차별의 공간이 됨. (-> 공영화 필요)

: 이제 '지속불가능한 신자유주의대학체제'로 진입한 듯.(교육부 「혁신안」 2019.8.5)

### (3) 구조 2 : '편수' 기준

- 논문 편수를 기준으로 한 승진·재임용 기준 등 급여와 인사 기준의 문제

: 교수·연구자의 '연구/교육/봉사' 평가 체계에서 '연구'에 큰 가중치를 부여. 이는 한국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이기 때문인가 아니라 지표 관리와 연구자를 체제에 용이하기 때문.

: 그러나 중하위 서열의 대학에서는 상대적으로 '교육' 지표가 중요

: 신규 임용 제도에서도 비슷. 논문 편수 외에 교수·연구자 평가에 대한 신뢰성 있는 다른 기준을 갖지 못함.

-> 정실과 부정으로 영겨온 대학사회의 '저신뢰' 문제와 교수사회의 약화

- 연구자와 교수의 논문 편수가 대학평가의 중요 지표인 한, 어떤 방법으로든 문제의 시정에 한계가 있음.(cf: 중앙일보 대학평가 교수 1인당 '국제' 논문 편수)

> 신문사 대학평가 폐지/거부의 중요성

> 대학평가의 공공화 필요

- 교수 직종과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연구·봉사 지표의 재배분·재구조화 필요

: 학문별 자율화, 세밀화

### (3) 교육부·한국연구재단

- 각종 제도 도입과 개혁에 관한 교육부·연구재단의 선도성

- 각종 사업 지표의 개선

: HK, BK 사업이 논문 증가의 주요한 구조적·역사적 요인

: 한국연구재단 각종 사업의 논문 편수 기준의 합리화·최소화(강사지원 사업 등) 필요. 사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 (4) 소결 : 질적 평가 체계의 확충

- 저서·번역서 평가 강화

- 인용지수(KCI)의 객관화·합리화·다면화 ?

- 동료평가 제도의 개선과 (가능한 분야에서의) 동료평가의 국제화? (연구가 필요)

- 연구/교육/봉사 지표의 재평가(대학 민주주의의 필요성)



## 2. 연구자 문화 및 주체성의 변화

- 지난 20여 년간 한국 인문·사회과학계에서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은 ‘연구자 문화’ 및 연구자 주체성의 변화. 이는 소위 ‘97년 체제’ 이후의 한국사회 전체의 변화(▷대학의 변화▷학문의 변화)에 직접 연관된 변화며, 고등교육과 학문의 위기에 따른 변화. 이로부터 더 크고 깊게 변화가 2010년대에 제동 없이 진행되어 옴.
- 교수 및 연구자의 고용과 존재방식 그리고 이른바 ‘학문 후속 세대’ 재생산 방식, 그리고 글쓰기와 인정투쟁 시스템의 변화, 우리 모두의 신체와 미시적 관계를 규율하는 신자유주의의 ‘레짐’은 더욱 파괴적이며 말기적.
- 2019년은 한국 고등교육사 그리고 인문학의 역사에서 특기할만한 한 해. 강사법 시행을 구실로 한 대량 구조조정은 어떤 효과를 발할까?

### (1) 프레카리아트화

- ‘삶’과 연구의 완전한 분리, ‘만성 과로’ 또는 ‘피로’와 냉소, 경쟁적이며 파편화된 ‘비정규’·‘불안정’한 삶
  - ‘인문학’ : 착취와 불평등에도 무기력. 자위·자족의 기제와 허위의식
  - 30여개 종류의 기만적 (비)정규직 교수제도
- : 프레카리아트화를 은폐하는 수단

### (2) 성과주체화 : “논문 한 편이라도 더 써라”

-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대로, “논문 한 편이라도 더 써라”는 정언명령 앞에서 다른 상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 논문 편수 인플레이
- ‘사업단’은 경쟁과 성과주의의 논리를 가장 깊이 수용하고 그리고 순응

### (3) 비관여성 또는 연구를 위한 연구

- ‘연구’의 진정한 존재 방식?
- 학문적 자율성의 작동 방향과 학문장에서의 제도의 기능화·자연화
- 요컨대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논문을 열심히 쓸수록) 연구자는 더 무능해지며 더욱더 깊이 신자유주의와 그 대학체제의 포로가 된다.

### (4) 파편화 - 비주체화

- 대학과 비정규직 문제 등에 관한 동어반복적이고 원론적인 비판과 한탄. 대안이나 행동 없는 파편적인 한탄 자체가 인문사회과학 ‘연구자 문화’의 일부가 되어 버림
- 파편적인 무기력의 문화 위에 경쟁과 이윤논리로 구성된 ‘체계’ 그리고 체계에 대한 연구자들의 복종과 의존의 문화

- 집합적인 행동과 공공적 지식 생산을 위한 대안적 연구자 단체나 대안 대학 운동도 없지 않지만, 규모·관심·권위를 아직 갖지 못하고 있음.

-> 대학 바깥 연구자 단체에 대한 지원 필요

- 냉소와 불신

: 협력의 부재와 공적 가치의 소멸

: 일상과 몸에 새겨진 연구자들의 비행동성

: 냉소적인 일중독자·개인주의자, 매우 성실하고도 우울한 만성피로 환자, 패배주의적이기도 냉소적인 프레카리아트가 (연구자) 자아상

- 재생산 불가능의 상황

: ‘소수의 정규직화 vs 대다수의 비정규직화’의 구도 심화

: 대학원 진학률의 급감

: 40대 이후 연구자로서의 삶의 포기

(1)~(4)는 인문 사회과학 전반의 상황.

(5) 박사 비정규직과 강사

- 박사 학위 소지 인문사회과학 비정규직 교수 300명에 대한 질적·양적 조사 연구(이하 출처는 송승철 외, 『한국 인문학 정책 연구 : 성찰과 대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인문학자로서의 품위와 생존을 유지하는 것에는 비관적 평가가 압도적이다. “타 분야에 비해 정규교원이 되기 어렵다”는 평가에 매우 동의하는 비율이 87.3%, “생계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 85.3%, “강의 자리가 줄고 있음”으며 82.3%, “강사료는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도 78.0%, 국내 박사학위로 정규교원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57.3%가 매우 동의한다고 밝혔다. 역시 “대체로 동의한다.”는 비율까지 합하면 이견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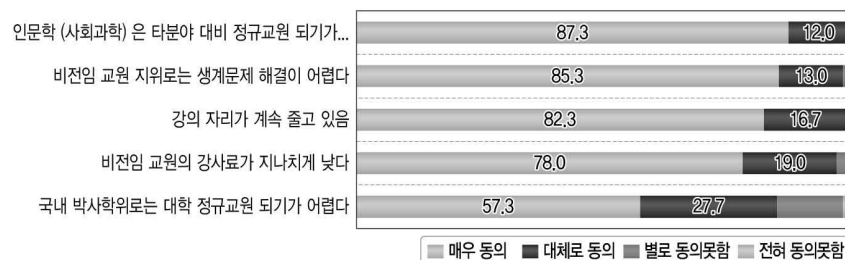


그림 1) 인문학자의 인식

가계 전체 소득(만원)		전공 관련 소득(만원)		전공/전체 비율	
전체평균	377.55	전체 평균	191.56	전체평균	50.7
인문학	357.77	인문학	173.77	인문학	48.6
사회과학	476.44	사회과학	280.50	사회과학	58.9
어학	334.38	예술/융복합	136.91	예술/융복합	33.0
문학	340.99	어학	152.50	기타 사회	40.0
철학/종교	350.89	철학/종교	174.74	어학	45.6
경제/경영	395.38	문학	176.76	철학/종교	49.8
법/정치행정	398.75	역사/고고	205.36	역사/고고	51.2
역사/고고	401.39	기타 사회	217.33	문학	51.8
예술/융복합	415.00	경제/경영	255.38	사회/심리등	62.7
사회/심리등	524.43	사회/심리등	328.93	경제/경영	64.6
기타 사회	543.33	법/정치행정	355.00	법/정치행정	89.0

표 2) 인문학/사회과학 비전임 교수 월소득과 전공관련 소득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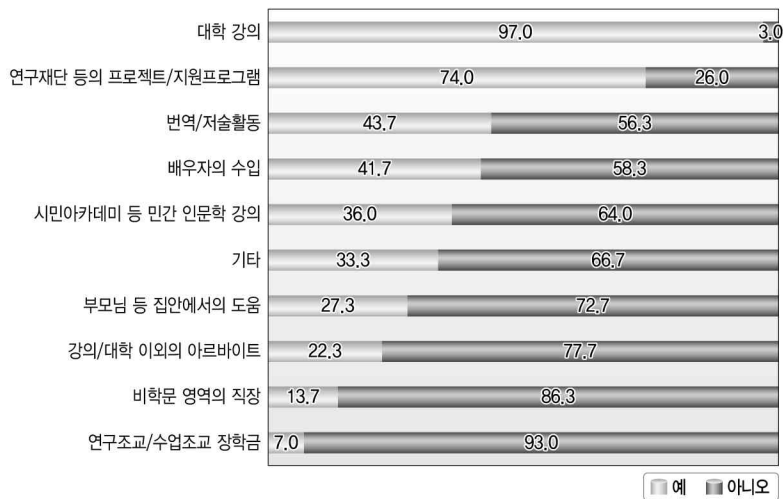


그림 2 지난 3년간 수입원 (인문학자)

-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의 조직 규모, '분노의 강사들'의 조직 규모
- 강사법 이후의 행동 방향

(6) 대학원생과 부불노동

- '연구노동'의 의미
- 전국대학원생노조의 역사적 의의

(7) 정규직 교수

- 정년보장제도의 약화 > 불안의 증대
- 대학 민주화의 필요성, 대학거버넌스의 부패

- 임금 피크제 필요 > 비정규직과 학문재생산을 위한 기금 조성
- 비정규직 포함 연구자 전체의 권익을 향상하는 방향에서의 정규직 기득권의 해체

#### (8) 여성 연구자

- 인문학의 여성 적대 : “철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성중심성이 강한 학문이다.”, “국문학 강좌에서 여성문학, 여성 문학 연구자는 여전히 주류로 취급되지 않는다.”, 여성사에 대한 공인은 국제적 추세임에도 “한국역사학은 여전히 성맹적(gender-blind)”.<sup>37)</sup>

- 페미니즘붐과 대학? 고용평등을 위한 운동은?

#### (5) 학회 등의 행동 변화와 연구자 상의 재창조

### 3. 학회 체계의 현황과 개선 방향

#### (1) 현황

- 2019년 8월 현재 인문학은 581(=508+73, 등재+등재후보), 사회과학은 879(=738+141)종의 학술지<sup>38)</sup>. 오늘날 한국의 연구자와 지식인들이 낸 말과 지식의 대부분은 ‘학술지’를 통해 쏟아진다. ‘학술지’야말로 한국 지식계의 언어와 삶의 중심이자 교통로이다. 반어적으로 그렇다.

- 학회의 상태가 연구자 문화의 상태를 반영. 학회가 각자(또는 패거리) 도생과 신자유주의대학체제의 도구로 기능.
- 지면 공급 초과 현상과 만성 원고 부족 (지원제도의 개정 필요)

#### (2) 규모·재원·운영의 영세성

- 인문·사회과학계 학회의 거의 대부분 소규모(회원 50명 내외)
- 재원 : 회비와 게재료 그리고 연구재단 등의 지원비 등 영세한 재원에 의지. 또는 정규직 회원의 기부
- 학술대회 기획, 논문 수합과 심사, 편집, 출판 등의 실무는 부불노동에 의해 이뤄짐.

37) 인용은 각각 김혜숙 2013, 「새로운 학문주체의 형성과 과제: 한국 여성철학의 경우」,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여성주의 연구의 도전과 과제-각 학문 영역에서 이뤄온 여성 연구의 과거·현재·미래』, 한울, 16쪽. ; 김양선 2013, 「한국 여성 문학 연구 장의 변천과 과제: ‘한국여성문학회’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여성주의 연구의 도전과 과제-각 학문 영역에서 이뤄온 여성 연구의 과거·현재·미래』, 한울, 54-55쪽. ; 정현백 2013, 「여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자리매김’과 ‘새판짜기’ 사이에서」,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여성주의 연구의 도전과 과제-각 학문 영역에서 이뤄온 여성 연구의 과거·현재·미래』, 한울, 137쪽.  
위 송승철 외 보고서에서 재인용.

38) 2014년에 인문학은 527종, 사회과학은 730종으로 5년 사이에 증감을 짐작해볼 수 있다.

(3) 지속불가능성

- 자족성·폐쇄성 : 분야에 따라 비슷한 내용과 성격의 학회가 난립하여 중복적인 구조로 운영
- 대학원생과 연구자들의 부불노동과 자기착취에 의해 운영

(4) 학회의 재구성 방향

- 학문적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
- 학술지 출간 운영 방식의 개선(1년에 3~4회, 120매 내외의 원고를 쓰고, 모아서 출간하는 데 드는 노동과 비용의 산정과 재구축화 필요.)
- 획일화된 글쓰기와 학술지 편집체제의 극복
- 섹트주의(출신 학교, 학과)의 타파
- 지식(인)의 사회와의 교통로 회복

\* 학회 연합(체)의 건설

- 비슷한 분야와 인적 구성의 학회는 과감히 통합하거나 인적·물적 자원의 통합으로 실질적·단계적 통합 필요(한국물리학회, 한국심리학회 등의 예)

# 학문의 위기와 한국연구재단: 조직혁신 및 학술지원 정책 방안

배성인(학술단체협의회)

## 1. 한국연구재단의 출범과 학문의 위기

한국연구재단은 2009년 6월 26일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한국학술진흥재단이 통합되어 생긴 학문지원 준정부기관이다. 이로써 종전의 3개 기관이 수행하던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 업무를 한국연구재단이 통합해서 대부분 수행하게 되었고, 기존의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에서 수행하였던 학자금 융자 및 장학사업들은 한국장학재단을 신설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이 기존의 다른 연구기관과 구별되는 특징으로는 첫째,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관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획과제 수행, 평가위원의 직접 참여, 우수성과에 대한 후속지원 등 연구과제 관리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였다. 둘째, 한국연구재단법 제2조 2항에 의해 재단은 그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셋째, 동법 제15조에는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가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한국연구재단의 목적을 법을 통해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학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이해되지만, 재단 설립 이후 연구사업 지원의 '독점'과 독점적 '관리'를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크게 우려스럽다. 또한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어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현재 대학과 학문이 자본과 국가권력의 지배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자본의 규모가 커질수록, 자본의 국가권력의 장악력이 높아질수록, 학문의 위계화는 급속도로 진행된다. 한국연구재단의 관리는 흔히 '지원'이라는 말로 통용된다. 이미 식상한 어휘가 된 '인문학의 위기'는 진즉 국가의 '관리' 하에서만 생존하고 있다. 자본의 부탁을 받은 국가가 관리 기구를 작동시킨 것이다. 교육부는 국가권력을 수단으로 대학의 연구를 강제하는 기관이고, 한국연구재단은 '지원'을 통해 학문을 관리, 통제하는 기관이다. 이는 비단 인문학뿐만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모든 학문 분야에까지 관리하고 통제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은 돈을 매개로 대학을 장악하여 위계화시키고 대학에서의 기술 개발을 통해 이윤을 증식한다. 따라서 자본의 입장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설립은 연구

개발(R&D) 분야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것이다.

이들 자본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권력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이데올로기 재생산과 자신에게 맞는 국민을 제작하기 위해 결코 교육과 대학의 지배를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공공성을 아무리 외쳐도 이는 수사에 불과하다.

대학의 붕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율성과 교육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공공성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공개적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복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을 때,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재화와 서비스, 위압적인 공적 권위를 ‘공공성’이란 용어로 포장해선 안 된다. 현재 ‘관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의 관료적·이데올로기적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대학은, ‘사회’가 아닌, ‘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취업 준비기관일 뿐이며, 동시에 한국사회의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결정하는 장치로서 기능한다. 그것은 자본과 국가를 영원히 재생산하는 장치인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대학은 모기업의 하청업체이거나 기업에 ‘인적 자원’을 공급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지로 전략한 지 오래다.

## 2. 한국연구재단의 목적과 기능의 문제

한국연구재단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연구재단의 주요기능은 ①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②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및 촉진 지원 ③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④ 학술 및 연구개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수집·분석·평가·관리·활용과 정책 개발 지원 ⑤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기관·단체의 연구·운영지원 ⑥ 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간의 교류협력 지원 ⑦ 기타 학술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참조).

결국 연구재단의 주된 사업은 인력 양성과 학술 진흥에 그 초점이 모아진다. 이러한 사업 목적은 인문사회과학 분야 비정규교수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대단히 권장할 일이며 더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력 양성은 곧 연구 역량을 제고하게 되고 이는 학술 진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의 주업무는 크게 연구지원과 연구관리로 나뉜다. 이들 업무는 학문과 지식의 생산-유통-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심각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첫째, 연구지원 분야를 본다면 학술연구의 모든 분야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지만 원천기술개발사업지원이나 원자력기술개발사업지원과 같은 사업 분야 목록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 사업은 이공분야의 연구에 치중되어있고 또 실용적 목적을 위한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물론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도 조금 부지런하면 어렵지 않게 연구지원금을 끌어올 수 있다. 연구재단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연구재단의 프로젝트는 전임교수들에게 경제적으로 커다란 도움이 안 된다. 인건비로 책정된 재정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그래도 본인의 실적과 평가 그리고 소속 대학의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와 함께 비정규 교수연구자들의 생계문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비정규교수들에게는 생존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프로젝트에 팔아, 거기서 연구력을 소진시킨다. 이들은 연구재단의 프로젝트가 공공근로사업 같아서 만감이 교차하고 비루한 삶의 회한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게다가 프로젝트가 아니면 생계 연장의 꿈을 이룰 수가 없어서 장기 사업이자 직업으로 선택한 이들을 주변에서 종종 목격하게 된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연구재단의 지원사업이 최소한의 실용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연구재단의 지원을 따내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당장이라도 현실에 적용되어 당장이라도 이윤이 창출되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머리를 짜낸다.

또한 연구재단에서 지원이 결정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성과물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것을 위주로 돌아간다.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연구 성과를 단기간에 제출하라는 연구재단의 요구 때문에 연구 호흡이 갈수록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연구 기간 동안 연구자는 안정적인 지원을 받게 되지만, 그 대신 연구 활동은 그에 상응하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연구재단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다른 데 눈 돌리고 자유롭게 연구를 수행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연구 성과가 학문과 사회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 수도 없다.

둘째, 연구관리 분야는 학술지 관리로 대표된다. 겉으로 보기에 연구지원과 연구관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연구지원과 연구관리는 상호의존적이다. 물론 재정이나 업무의 규모로 본다면 연구지원이 연구관리 분야보다는 훨씬 크다. 그러나 연구지원이 연구



관리 대상이 되는 학술논문 업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학술관리가 한국연구재단의 사업에서 더 근본이 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관리는 학술활동이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으로 가시화되기 때문에 학술지 관리로 대표된다.

학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학문진흥책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199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 그리고 그 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관리체제 구축의 성과는 성공적이었다. 한국연구재단이 인정하는 학술지의 수는 비약적으로 늘었으며 또 한국연구재단의 관점에서 볼 때 학술지 자체의 질적 관리 노력 역시 상당하다.

연구비를 명분으로 대학과 학문을 지배하는 한국연구재단은, 학문 행위에서의 ‘합리화’를 요구한다. 연구재단은 모든 것을 계량화 해 정량적인 평가 기준을 만든 것이다. 모든 학회의 학술지를 ‘등재지’와 ‘비등재지’로 나누는 순간 비등재지는 모두 어두워야만 살아나는 좀비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등재지를 향한 경쟁과 질주도 시작되었다. 등재(후보)지가 되었다는 것은 학술지간 상호 간격이 없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평균적으로 등재지화 하는 것은 상호 우열을 없애버린다. 이전에는 자율적으로 그 등급이 결정되어 있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이 시작되는 그 순간, 그 자연스러운 등급이 사라진 것이다. 학술지 문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은 지원을 구실로 하여 학술대회와 형태, 참여인원수, 논문의 심사 과정, 학술지의 형태, 편집위원의 구성 등 ‘모든 것’을 간섭한다. 대학의 연구자들은 본격적으로 푼돈을 구걸하기 위해 자신의 존엄과 자유를 팔아먹은 노예가 되었다.

이와 함께 논문 중심의 획일적인 잣대로 연구 지원을 하게 되면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글쓰는’ 연구자들이 자연스럽게 지원에서 배제된다. 지식인은 시대적 요구와 대중적 요구에 답을 해야 하는데, 연구재단이 대중과의 소통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 교수연구자들은 생존의 갈림길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연구재단을 선택하게 된다. 비록 이들이 정규직 대학교수의 꿈을 접거나 원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그래서 ‘학문의 위기’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연구자들의 대중적 글쓰기와 연구재단이 요구하거나 대학교수가 되기 위한 논문 실적은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3.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문제

한국연구재단은 출범할 때부터 태생적 한계를 지녔는데, 그것은 인문사회과학 부문과 이공계 부문을 통합하여 운영했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재단의 목적이나 기능, 정책 집행과 책임, 그리고 예산 편성과 배분의 문제 등 외부의 시선으로는 상당히 심각하다.

무엇보다 연구재단은 전문성, 민주성, 공공성이 결여되어 있다.

#### 1) 전문성 결여: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 사업

전문성의 결여란 사업의 중복 편성과 예산 낭비로 인해,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사업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 배분 위주의 사업 방식, 기존 사업의 답습, 행사 위주의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계획 단계에서 사업 중복과 답습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는데, 기존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을 해마다 단순 반복되면서 낭비적 요소가 크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학계의 다수 주체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공기관이 확실히 책임지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 단계에서 건설적 평가의 부재로 인해 사업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계획-집행-평가의 피드백 과정을 만들어내지 못함에 따라, 양적 성과에 치중하여 사업의 무의미한 반복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 2) 민주성 결여: 학계 배제와 그로 인한 투명성과 공정성의 위기

민주성의 결여란 학계의 참여가 미흡한 상황에서 관료 주도의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사업 계획, 집행, 평가에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재단은 조직 운영과 사업 진행에 있어 상급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자율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는 연구재단이 단순한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연구재단은 능동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보다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수행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재단은 외부 참여 없이 폐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해마다 반복되는 공정성 논란을 비롯, 연구 사업 선정 등에서도 적절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명확하게 해결된 적은 없다.

연구재단의 민주성 결여로 인해 생겨난 대표적 문제 상황이 바로 사업 선정의 공정성 논란이다. 비록 학계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일부 과제 배제는 심증적으로 리스트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연구재단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교육부의 권한 독점

과 수직적 관료제화로 볼 수 있다.

### 3) 공공성 결여: 연구재단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

연구재단은 공적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며 공공성 구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로 인해 연구 인력과 역량이 가지는 공적 가치와 관련된 사업이 미흡하다.

연구재단이 현재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학술(학문)정책에 대한 국가철학과 비전의 부재에 있다. 현재와 같이 판단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관료적 논리에 따라 외형에 치중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배치하여 반복하는 것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문정책에 대한 국가 철학과 비전의 부재는 연구재단의 정체성 결여를 낳고 있다. 연구재단은 민간/시장과는 구분되는 공공기관이라는 조직적 성격과 존재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고유한 가치와 역할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연구재단이 공적 인프라를 형성하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에 그 역할이 그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문제는 상호 연결된 것인 바, 이 중에서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민주성의 결여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은 연구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4.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원 정책의 문제

### 1) 학술지원사업의 한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교수연구자들에게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시간과 예산 낭비만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주된 목적은 당연히 인력 양성과 학술 진흥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동안 한국연구재단에서는 학계의 비판이 거셀 때만 형식적으로 소규모의 변화만 가져왔으며,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데 주저했거나 무관심했다. 수많은 교수연구자들의 비판적 의견에 아랑곳 하지 않고 사업을 유지해 온 것이다.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크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1) 기초학문 마스터플랜이 없다

연구재단의 지원사업에는 인문한국(HK) 사업, 사회과학연구지원(SSK) 사업, 중점연구소, 토대연구 등 대규모의 인문사회 기초 지원이 현존하고 있지만 그 전체 지원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인문사회계열 지원규모가 이공계에 비해 부족한 것은 '대중성과 상업성' 때문이다. 소위 말해 부가가치 창출을 못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기초학문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 당국에서는 연구재단의 대형과제를 마스터플랜의 일환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바뀌거나 단기간 연구로 종료되는 정책사업들은 당연히 마스터플랜이 될 수 없다.

또한 이들 사업이 진행되면서 원래 실행목표였던 비정규직 교수들의 안정적 연구 상황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일부 비정규직 교수연구자들의 경우에는 기간에 맞춰 논문을 양적으로 생산하기에 바쁘고, 지속적으로 다른 연구자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 안정된 연구환경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그리고 소신껏 자기가 하고 싶었던 주제를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이라는 고용안정을 약속했지만 이를 준수한 대학도 많지 않으며 그 숫자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창의적 학문생산을 위한 석·박사 후학들과의 중간 매개 역할도 어려워졌다.

기초학문의 마스터플랜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적인 활동영역 넘어서 보편적 가치와 관련되고, 역사적으로 요청되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며, 미래 사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인문사회과학 일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독자 기구 설치와 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문사회과학 지원법' 등을 만들어 인적·재정적 안정화를 기하고 학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재단과 같은 지원사업 기구가 아니라 정부로부터 자율적인 '한국인문사회과학위원회'를 만들어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학문발전과 지원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 (2) 대형·집단연구의 비경제성과 불명확성

현재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집단연구 사업은 대학중점연구소, 학제간융합연구, 토대연구, 인문한국(HK) 사업, 사회과학연구지원(SSK) 사업 등이다. 이들 집단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원 규모가 대형화되면 연구 성과에 대한 비교·평가와 집단 간 경쟁을 통한 책임감 향상이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모두 장기 대형과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이지 않지만 비정규직 교수들의 고용문제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 못지않게 연구비를 지원받는 개별 연구자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작용 또한 심각하다. 첫째, '규모의 비경제성'이다. 연구비 규모가 커지고 연구조직이 대

형화함에 따라 당연히 행정적 업무와 이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연구의 지속성을 위한 평가 업무에 불필요하게 많은 연구역량이 투입되고 있어서 비경제적이다. 연구자가 행정업무에 전념하는 시간이 필요이상으로 소비되고 있다.

둘째, 개별 연구자의 독창적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의 집단연구는 연구책임자가 전임교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교수연구자는 공동연구원이나 연구교수의 신분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독창적인 연구주제보다는 사업단이 요구하는 주제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연구재단의 지원사업에 개인 연구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비정규직 교수들의 신분과 미래가 불투명하다. 대형·집단연구의 연구기간은 보통 6-10년이다. HK사업을 제외하고는 연구기간 종료 후 비정규직 교수들의 신분과 처우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불안정성 문제가 있다. HK사업도 지난 2017년 사태에서 봤듯이 연구재단과 대학 측 모두 무책임한 태도를 지니고 있어서 비정규직 교수들의 미래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넷째, 집단연구의 목표가 불명확하다. 교육 당국에서 대형·집단연구의 목표가 기초학문 마스터플랜이라면 이에 걸맞은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것은 대학 연구소의 역량 강화, 집단연구 활성화 그리고 역량 있는 신진연구인력의 육성 등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사업의 일차적 목표가 대학 연구소의 육성 및 집단연구의 활성화에 있는지, 아니면 신진연구인력의 육성과 기초학문의 보호에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이를 위해 연구재단은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대학 측에서도 연구소나 사업단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육성의지를 표명해서 비정규직 교수들의 신분 보장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 2) 인력양성사업인 HK사업의 문제

인문한국(HK) 사업은 연구재단의 대표적인 인력 양성 사업이다. 2007년 “대학 내 인문학 연구소 집중 육성을 통한 인문학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 연구 성과 창출”을 목표로 걸고 시작한 ‘인문한국’ 지원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지원 체계로 꼽힌다. 2017년 7월 기준으로, 전체 43개 인문한국 연구소가 연구소당 평균 10억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 <표 1> 인문한국 지원사업 주요 내용

지원기간	최대 10년
지원현황	43개 연구소에 소당 평균 10억원 지원(2017년 7월 기준)
지원내용	HK교수(정년트랙) 임용 의무화, 연구활동비 및 사회적확산 활동비 지원

출처:『한겨레신문』(2018.6.8.)

인력 양성 방식은 연구소 소속 전임 연구인력(HK교수)의 인건비를 국가가 10년 동안 지원하고 그 뒤엔 대학이 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학과 중심에서 벗어나 연구소 중심으로 새로운 학문 주체를 만들자는 것이 인문한국 지원사업의 주된 목표였다.

그러나 국가 지원이 끝나자 각 대학들은 연구소 중심의 인력 운용을 계승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를 연출하였다. 사립대는 열악한 재정 상태를 이유로, 국공립대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제도를 이유로 ‘HK교수’들의 전임 채용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연구재단은 2017년 6월 기준으로 인문한국 지원사업으로 인문한국 교수 229명, 인문한국 연구교수 193명 등 전체 422명의 전임 연구인력을 확보했다고 집계했으나, 국가 지원이 끝난 뒤의 현황은 파악조차 어렵다고 한다.

연구재단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총 504명의 연구 인력을 양성해서 연평균 논문 379편, 단행본 24편 그리고 총서 23편을 발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게다가 학술회의와 학술지 발간 등을 포함하면 그 성과는 매우 의미가 있다.

<표 2> 인문한국 지원사업 성과

인력	10년 동안 재직 인원 총 504명(HK교수 37%, HK연구교수 63%)
학술성과	연평균 논문 379편, 단행본 24편, 총서 23편 발간
사회적 소통	연평균 283회 학술회의, 196회 강좌 및 후속세대 양성, 교양총서 107권 발간, 기고문 129회 게재
국제화	총 1,321건의 학술지 발간 및 국제교류 진행
제도 개혁	연구 전업 HK교수의 정년 보장 및 직위 확보 가능성

\* 2017년 사업 종료된 16개 연구소(인문 분야 13개 사업단, 해외지역분야 3개 사업단)

출처: 한재영(2018); 『한겨레신문』(2018.6.8.).

하지만 인문계열에 무려 10년 동안 1500억 원이 넘는 돈(사업 종료된 16개 사업단)을 투자해서 불과 504명의 인력을 양성했다는 것은 외형적 성과를 떠나서 실패한 사업이다. 또한 그 결과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향후 우리의 학술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 지 단적으로 암시해주는 우울한 대목이다.

인문한국 지원사업의 심각한 난맥상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학술정책 부재’가 가져온 문제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학술정책이 부재하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해방 이후 우리의 학문 체계는 서구의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종속적인 학문 체계를 갖게 되었고, 교육 정책과 교육 과정 역시 우리의 일상과 역사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바람에 학벌주의와 능력주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해방 이후 정부가 수립되자 정치권력들은 학문을 전체주의적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데에만 급급했을 뿐, 학술과 학문에 사회적 위상을 부여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특히 전문관료도 아니면서 학술 분야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관료가 학술정책을 좌우하는 시스템이 20년 넘게 지속되어온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공공성을 포기한 대학 당국 역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HK사업이나 2018년 재구성한 HK+ 사업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그 외에 중점연구소 사업이나 SSK 사업의 경우에는 HK사업에 비해 관심이 매우 저조하다. 이들 사업의 경우 연구기간이 종료되면 소속 연구교수들은 자신의 미래와 생존 문제 대해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들 대부분은 대학에서 다시 시간강의를 하면서 연구재단의 시간강사사업에 계속 지원을 하던가 아니면 외부 프로젝트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각자도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집단연구는 그 효율성이나 장점보다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들 사업인 HK, 중점연구소, 토대연구 등을 통합하여 최소화하고 개인연구를 중심으로 확대해서 장기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집단 연구 역량은 연구자들에게 안정적인 신분과 소득이 보장될 때 배가되는 것이다. 생색내기 및 전시용 사업은 인력과 재정 모두 낭비적 요소가 크다. 인력 양성은 학술정책이 연구자 재생산과 선순환구조를 이룰 때 가능한 것이다.

### 3) 학술지 관리 방식의 문제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관리는 학문을 위축시키는 관리체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는 학문이 그 속성상 관리가 강화될수록 위축되고 고갈되기 때문이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관리방식은 크게 보아 첫째, 학문 활동 주체의 관리, 둘째, 학문 논의의 장의 관리, 셋째, 학술 연구 성과의 관리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리방식은 사실상 학문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학문을 위축시킨다.

첫째,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관리 체제는 해당 분야의 비전문가를 학술논의에서 배제하

면서 시작된다. 사실 학문의 변화와 발전은 특정 학문 분야의 기존 지식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함으로써 이런 지식체제를 변화시킬 때 이루어진다. 이런 도전은 해당 학문 분야의 비전문가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관리 체제는 이런 비전문가의 학문적 논의가 인정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학술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정된 사람들의 모임인 학술연구자 단체 또는 학술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를 말하기 때문이다. 비록 형식적이지만 해당분야에서 의미 있는 학술논문을 쓸 수 있는 연구자는 기존의 학회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아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자격이 없다. 이런 체제에서 해당 전문 분야의 지식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학문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배제된다.

둘째,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관리 체계는 학술 논의의 장을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밖에 있는 학술 논의의 장을 배제함으로써 학문을 위축시킨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학문적 논의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다. 아직 등재지가 되지 못한 학술지와 '비학술지'에 실린 학문적 논의는 의미있는 연구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학문의 논의의 장을 제한하는 관리 체제 역시 학문의 발전을 위축시킨다.

셋째, 한국연구재단은 학술 연구 성과를 OA(Open Access)제도를 통해 공급하고 관리한다. OA는 연구자 및 학자들의 자유로운 참여에 의해 법적, 경제적, 기술적 장벽 없이 전 세계 이용자 누구라도 자유롭게 무료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생산자와 이용자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학술논문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준정부기관으로서의 독점적 행태와 관리 체계를 고려하면 부정적 인식도 상당하다. 그것은 한국연구재단이 등재(후보)지 평가 권한을 이용하여 학회에게 논문의 무상 공개를 사실상 강제하고, 학술지 지원을 통해 연구자들의 동의를 온전하게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하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자들과 연구품토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요소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 5. 학술지원사업의 혁신 방안

### 1) 충분한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연구개발(R&D)에 배정하는 예산 규모는 2016년에 19조 942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인문사회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규모는 7,982억 원 정도 된다. 여기서 정책연구비와 경제인문출연금 등을 제외하면 '순수' 연구개발비 규모는 2,990억 원 가량이다. 전체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인문사회계열의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한 것이다(『한겨레신문』, 2018.6.15.).

<표 3> 한국연구재단 예산현황

(2019년 2월)

사 업	예 산
국책연구 지원	18,355억원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	17,366억원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지원	2,259억원
연구진흥 및 인재양성	18,033억원
국제협력연구 지원	808억원
기타	780억원
총계	5조 7600억원

출처: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이러한 재정 규모로는 연구재단의 설립 목적인 인력 양성과 학술 진흥을 달성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R&D의 1.6%에 불과한 연구개발비를 2-3년 안에 2배인 최소 3.0%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민간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인문사회 분야 학문은 사실상 정부의 지원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재단의 1년 예산은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5조 7600억 원인데, 이 중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예산은 3000여억 원으로 5.3%에 불과하다. 이 3000여억 원 규모의 지원 시스템이 오늘날 한국의 인문사회계열 학문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 2) 사업 개편안

2016-7년 촛불로 인해 정권이 교체되면서 연구재단도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진보적 학자로 알려진 교수연구자 2명이 본부장으로 들어가서 내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올해는 새로운 학술지원사업을 발표하였는데, 대표적인 인문사회 분야 사업은 연구소 사업으로 예산이 외형적으로 164억원에서 337억원으로 2배나 증액된 것이다. 이외에 명저번역지원사업, 융복합 공동 연구 지원도 소폭 확대되었다. 하지만 인문사회계열 비정규직 교수들의 연구안전망을 위한 사업 확대나 혁신은 찾아볼 수 없다. 2018년에 수립된 정책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해도 교육 당국의 비정규직 교수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인문사회계열 비정규직 교수의 연구안전망은 지속가능한 처우개선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들의 신분보장은 강사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적 실천을 통해서 이행되어

야 한다. 하지만 2017년 HK사태를 목도하면서 교육부와 연구재단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더욱 떨어진 상태이다.

그래서 연구재단의 지원사업은 더욱 혁신되어야 한다. 현재의 지원 사업은 매우 방만하고 실효성이 낮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집단연구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데,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비정규직 교수들은 비판적이며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강사법의 개정과 함께 연구재단 지원사업의 개편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4> 학술지원사업의 개편안

사업명	세부사업(선정유형)
1. 개인연구 지원사업	① 학문후속세대 지원 (박사후연구자지원, 강의연구교수, 시간강사지원 통합)
	② 개인연구 지원(신진, 중견, 우수연구자 통합)
2. 집단연구 지원사업	③ 공동연구 지원(소형, 중형)
3. 연구소 지원사업	④ 중점연구소 지원(소형, 중형)
4. 연구성과 확산사업	⑤ 학술저역서 지원(번역, 학술서)
	⑥ 네트워크형 학술문화 지원 (국제포럼, 네트워크 구축, 강좌지원, 인문 역사문화도시)
5. 청년연구자 지원 사업	⑦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부·대학원생 학문후속세대 양성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첫째, 대형·장기 연구지원의 최소화다. 기초연구, 토대연구, 융합연구, 인문한국 등 대형화된 연구들은 ‘한국인문사회과학연구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전 연구를 통해 연구 아젠다를 전략적으로 설정하여 안정적인 연구 역량의 대학, 학술단체 등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전략적 단위에서 수행하면 된다. 중점연구소 사업은 소형과 중형으로 나누어 지원하는 게 적합하다.

둘째, 장기 지원 개인연구의 대폭 확대다. 연구자들은 일회성 프로젝트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장치를 선호하고 있다. 기존의 지원 사업 중에서 국제교류군, 학술활동 및 연구윤리활동 등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학술연구교수’와 같은 형식으로 일원화해서 인문사회계열 비정규직 교수연구자에게 지원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올해 시간강의를 배정 받지 못한 비정규직 교수연구자 중에서 5,000-10,000명에게 연 4000만원 내외로 10년(3년+3년+4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재정 2-4,000억 원은 현재의 인문사회분야의 연 예산 3000여억원 중에서 장

기과제를 포함한 주요 사업(1천여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대폭축소하거나 폐지해서 발생한 2천여억원의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 최종적으로 1만 명에게 필요한 4천억원은 교육부와 대학 측의 협력 하에 기획재정부에게 지속적인 요구와 압박을 가해서라도 확보해야 한다.

선발 방식은 10개 내외의 큰 범주를 제시하고, 각 범주 아래 대주제를 설정하여 지원자를 받는다. 선발은 지원자 중에서 ‘추첨’으로 한다. 국내 박사 우대 쿼터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원자격은 ‘최근 5년간 1편’만 충족하면 된다. 재선발은 3년+3년+4년으로 한다. 재선정 기준은 3년의 연구 기간 동안 최소한 논문 1편 이상의 성과가 있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sup>39)</sup> 재선정에 탈락한 연구자라도 다음 해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연구재단보다는 별도의 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각 지역의 대학에서는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연구공간 및 연구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단, 대학은 해당 학술연구교수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강의 담당을 포함한 어떠한 협력이나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대학들이 학술연구교수들의 공동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대학간 네트워크를 만들어 대학 구조조정 및 지역의 대학원 연합체제에 기여하도록 한다. 비정규 교수연구자들의 처우개선 및 신분 보장은 중장기적으로 국가교수 제도나 고등인문사회과학원을 설립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연구재단은 학술정책 기획·집행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규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현재 연구재단은 예산과 조직의 비대화 및 독과점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학문에 대한 획일화와 대학에 대한 지나친 통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 6. 결론

‘대학의 위기’, ‘학문의 위기’ 담론은 이제 식상할 만큼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이 돼 왔다. 하지만 위기 상황을 타개할 만한 특단의 대책은 도입되지 않았다. 인문·사회과학의 위기 상황은 시장에 의해 촉발됐으며, 국가는 일관된 경제주의 관점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시장의 압박을 옹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 결과 인문과학의 위기, 사회과학의 위기 상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

39) 참고로 일본의 경우 교토대학 하쿠비프로젝트(<https://www.hakubi.kyoto-u.ac.jp>)가 있는데, 차세대연구자육성지원사업이다. 2009년부터 매년 20명 정도의 국내외 연구자를 선정, 5년간 교토대학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신분을 부여하고 거기에 준하는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 월급(40-70만엔)과 별도로 100-400만엔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최대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중간 평가는 없고 보고서 제출로 마무리한다.

물론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학술연구 지원 사업이 예산을 확대하고 연구과제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더해가며 일정 정도 제도화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학계에서는 그러한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기초해 학술정책의 발전을 위해 비판과 함께 정책 대안들을 꾸준히 제시해왔다. 하지만 학술정책의 진보는 계속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의 출범과 함께 학술정책의 퇴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인문·사회과학은 위기이며 정부의 학술정책은 학문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의지도 역량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재단은 인문·사회과학 위기를 확대재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 해결능력은 고사하고 자정기능조차 지니지 못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연구지원 사업을 통해 정부의 학술정책을 집행하는 연구재단을 시장의 암시와 국가권력의 지시에 홀린 선무당 정도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연구재단이 시장이나 국가권력보다 공익을 우선 시하고,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학문의 장기적 발전 전망에 입각해 학술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연구자들의 몫이다.

지금은 무엇보다 비정규 교수연구자와 학문공동체, 나아가 학문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그래서 대학에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인류는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시장화, 상품화, 이기주의, 생명 경시 등 비인간화 문제로 새로운 삶의 방향에 대한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환경에서 미래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대학이다. 대학은 본래 고된 노동과 질병 그리고 억압과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수많은 지식과 이론을 생산하고 전달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을 진보적 삶을 위한 탈물질주의, 코문주의, 생태주의 등 새로운 시대를 위한 협동적 덕목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곳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대학의 진보적 가치는 인류의 보편적 삶을 주도하는 인재 양성에 있다는 자명한 논리를 교수연구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남훈. 2011. “시간강사를 국가연구교수로.” 김상곤·김윤자·강남훈 외,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한다』. 창비.
- 강명관. 2007. “다시 대학의 인문학을 생각한다: 공장의 침묵.” 『코기토』, 제62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고부응. 2012. “한국연구재단의 학문 관리와 학문의 몰락.” 『문화과학』, 69호. 문화과학사.
- 김 원. 2008. “1987년 이후 진보적 지식생산의 변화.” 『경제와사회』, 제77호. 비판사회학회/한울.
- 김귀옥. 2018. “학문절벽의 시대, 비정규직 연구자의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실태조사.” 『정신문화연구』, 제41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 김필동. 2000. “전환기 한국 지식정책의 현주소: ‘신지식인론과 BK21사업’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제46권. 비판사회학회.
- 대학교육연구소. 2018. 『대교연 통계(기본)』, 2017-18년 17호.
- 문강주. 2009. “한국연구재단법 : 전문성·국가경쟁력 강화의 주역 기대.” 『國會報』. 대한민국국회.
- 배성인. 2013. “교육: 교육문제의 핵심, 한국의 대학.” 『사회문제를 보는 새로운 눈』. 선인.
- 배성인. 2015. “대학의 시장화와 한국연구재단 학술 지원 사업: 비판과 과제.” 김영수·배성인·김성태, 『지식의 공공성 딜레마』. 알렙.
- 배성인. 2018. “인문사회계열 비정규교수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위한 새로운 모색: 한국연구재단 사업의 재구성 과 제도적 방안.” 국회토론회 자료집, 『학문절벽의 시대, 비정규 교수·연구자의 위기 실태와 극복 방안』. 2018년 6월 21일.
- 배성인. 2019. “인문사회계열 비정규직 교수들의 ‘연구안전망’을 위한 한국연구재단 지원 사업.” 『경제와사회』, 제121호. 비판사회학회.
- 신희영. 2014. “한국연구재단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 『경제와사회』, 제103호. 비판사회학회.
- 이명원. 2008. “진보적 학술운동의 비판적 성찰과 전망.” 『새로운 진보학술운동의 모색』. 한국사회포럼 2008. 학술단체협의회.
- 이태동. 2008. “학술연구지원기관의 조직 설계 방향 및 조직모형.” 『학술정책』, 제2호.
- 임운택. 2017. “대학교원의 프레카리아트화, 진단과 대안 모색.” 한국대학학회 편, 『대학정책, 어떻게 바꿀 것인가』. 소명출판.
- 장세훈. 2002. “학술정책과 연구-교육체제의 변동: ‘두뇌 한국(BK)21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6집(2호). 한국사회학회.
- 조관희. 2008. “‘인문학 위기’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1.” 『중국어문학논집』, 제48호. 중국어문학연구회.
- 최 윤. 2018. “과학기술 연구 환경의 문제와 과제-청년 과학기술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41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편. 1991. 『한국학술진흥재단 10년사』.
- 한재영. 2017. 「인문한국 지원사업 10년 성과 분석 및 사업백서 발간」, 2017년 한국연구재단. 『뉴스1』(2014.12.18. <http://news1.kr/articles/?2007611>)
- 『한겨레신문』(2018.6.8.).
- 『한겨레신문』(2018.6.15.).